2026년 지방정부 혁신 실행계획

2026. 4.

대전광역시

목 차

Ⅰ. 총괄표 ····· 1

Ⅱ. 추진과제 ····· 5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 5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 17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 28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41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 53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 67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 82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93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 103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12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 123

Ⅲ. 소확신 과제 ····· 129

Ⅳ. 정부혁신 확산 방안 ····· 133

Ⅰ. 총괄표

주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세부추진과제명	소관부서	추진일정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 2026 대전 0시 축제 시민 참여 공모전	관광진흥과	~ '26. 4.
2. AI 활용 부정식품 척결을 위한 수거·검사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민생사법경찰과	~ '26. 12.
3. 대전의 맛 선호도 조사	식의약안전과	~ '26. 11.
4. PM(개인형 이동장치) 없는 시범거리 조성	보행자전거과	~ '26. 4.
5. 주민 참여 기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고도화	식의약연구부	~ '26. 12.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1. 매장유산 가이드 AI 디-헤리티지	문화유산과	~ '26. 2.
2.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도시정비과	~ '26. 12.
3. 정보공개 확대로 정책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공	소통민원과	~ '26. 12.
4. 대전상장기업지수 개발 및 공표	기업지원정책과	'26. 1. ~
5. QR 코드를 활용한 시설물(교량 등) 안전정보 공개	시설부	'26. 5. ~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1.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역제한 폐지를 통한 예우 확대	보훈정책추진단	'26. 4. ~
2.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 지원	과학협력과	~ '26. 12.
3. 도로공사 현장민원 사전점검 및 주민소통 강화	건설부	'26. 1. ~
4. **[대표과제]** AI 기반「대전식품검사봇」 서비스의 공공 AX 전환 및 고도화	식의약연구부	'26. 2. ~
5.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환경연구부	~ '26. 12.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1. 한밭도서관 다문화기관방문 독서 지도 프로그램「다독다독」	한밭도서관	~ '26. 5.
2. 대전 공공도서관 AI·SW특강 추진	한밭도서관	'26. 1. ~
3.「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실험실」운영	감염병연구부	~ '26. 12.
4. 관리취약시설(노인복지관)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체계 구축	환경연구부	~ '26. 12.
5. 여성복지시설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지원	여성가족원	~ '26. 10.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1. 2026년 대전 전세사기 ZERO 로드맵 추진	토지정보과	'26. 3. ~
2.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리 강화방안 마련	회계재산과	~ '26. 5.
3. 농촌지역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자연재난과	~ '26. 12.
4.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	질병관리과	'26. 1. ~
5. 자전거도로 정비표준 마련	보행자전거과	'25. 6. ~
6.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철도정책과	~ '26. 10.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1. 웹툰 IP 기반 시민참여형 콘텐츠 생태계 혁신 구축	문화콘텐츠과	~ '26. 12.
2. 대전광역시 자율주행버스(A5) 실증 운영	교통정책과	'26. 5. ~
3. 바이오헬스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바이오산업과	~ '27. 1.
4.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설립) 및 운영	식의약안전과	'26. 1. ~
5. 청년참여형 식품안전 정책·관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식의약연구부	~ '26. 11.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1. 트램 정거장 공공목적용 지주 이용 간판 허용	도시경관과	~ '26. 10.
2. 횡단보도 그늘막 옥외광고 허용	도시경관과	~ '26. 10.
3. 공시정보 '민간 플랫폼(T-map 등) 선제 제공 체계' 구축	건설부	'26. 1. ~
4. 찾아가는 대기질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환경연구부	~ '26. 12.
5.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센터 운영 확대	동물위생시험소	~ '26. 11.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1. 고지서 발송 업무감축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송달 확대	세정담당관	'26. 1. ~
2. 예산성과금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세입 창출 및 효율적인 세출 절감	예산담당관	~ '26. 5.
3. 당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당직제도 개편 추진	운영지원과	~ '26. 9.
4. 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	정책기획관	~ '26. 12.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1. 대전시 주도, 전국 단위 체납법인 협업 징수체계 구축	세정담당관	'24. 12. ~
2. 대전시 공원·녹지 수목 관리 기술 역량 강화	공원수목원과	~ '26. 12.
3. 도로공사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시설부	'26. 4. ~
4. 최첨단 극미량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관리 고도화	식의약연구부	~ '26. 12.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대전광역시 생성형AI 영상제작시스템 도입	홍보담당관	~ '26. 7.
2. 정보시스템 DB 품질진단 및 컨설팅 추진	법무통계담당관	~ '26. 11.
3. 대전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산업입지과	~ '26. 12.
4. 하천 불법행위 예방 및 유지관리 스마트 단속체계 구축	하천관리사업소	~ '26. 12.
5. AI 기반 매개모기 감시체계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감염병연구부	~ '26. 12.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 전 직원 AI 역량강화 교육	정보화정책과	~ '26. 11.
2. AI 역량교육 지원	인사혁신담당관	~ '26. 12.
3. AI Agent 개발 교육	반도체바이오산업과	~ '26. 3.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방정부혁신) 과제

1. 스포츠 꿈돌이 종목별 캐릭터 개발 및 활용	체육진흥과	'26. 1. ~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	식의약안전과	~ '26. 12.

Ⅱ. 추진과제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1 2026 대전 0시 축제 시민 참여 공모전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관광축제팀	연락처	042-270-3998

□ 추진배경

○ 시민 참여 기반의 창작 활동 추진, 공감도 높은 콘텐츠 생산 및 능동적 확산 효과 증대로 홍보 효과 극대화

○ 기존의 관 주도 홍보 방식의 고착화된 축제 이미지 한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창의적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이미지 발굴 필요

○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며 공감의 폭을 넓히고 축제 브랜드가치 제고

□ 세부 추진사항

○ 공모전 개요

공모명	대전 0시 축제 로고(BI) 디자인	대전 상징 티셔츠 디자인	대전 0시 축제 로고송
공모기간	'26. 2. 13.(금) ~ 3. 12.(목)		'26. 3. 30.(월) ~ 4. 17.(금)
공모내용	대전 0시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 디자인 발굴	대전 대표 관광자원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티셔츠 디자인 발굴	대전 0시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송 발굴
공모주제	『대전 0시 축제』 자유 주제	❶대전 관광·문화·도시를 표현한 ❷반팔 티셔츠 디자인	대전 0시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송

○ 심사 절차 / 단계별 심사를 통한 공정성, 전문성 확보

- **(심사절차)** 1차(규격·형식 등 검토) ⇒ 2차(심사위원의 심사표에 의한 평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민 주도형 콘텐츠 양산 및 참여 기회 확대

: 공모 분야 다각화 및 시민 참여 확대(3회) / '25년도 공모전 1회 추진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단일 공모전 운영으로 시민참여 제한적 • 관(官) 중심의 일방향 정보 전달 • 단순 방문객으로 축제 일회성 경험에 국한	• 3개 분야 확대 운영으로 폭넓은 참여 유도 • 시민 공감형 콘텐츠 생산 및 능동적 확산 효과 증대 • 공모전 참여로 사전 소속감 및 주인의식 고취

□ '26년 소요예산

구분	대전 0시 축제 로고 디자인	대전 상징 티셔츠 디자인	대전 0시 축제 로고송
소요예산	9,200천원	9,200천원	9,200천원

□ 추진일정

○ 로고 및 티셔츠 공모전

- 공고 및 접수(2. 13. ~ 3. 12.), 작품 심사(3. 13. ~ 18.), 당선작 발표(3. 20.)

○ 로고송 공모전

- 공고 및 접수(3. 30. ~ 4. 17.), 작품 심사(4. 20. ~ 29.), 당선작 발표(4. 29.)

□ 홍보계획

○ 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SNS(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카드뉴스 게재 및 SNS 노출 광고, 전국 지자체 협조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등

○ 대학생 공모전 플랫폼, 지역 대학 게시판 활용하여 지역대학 재학생 참가 모집

1-2 AI 활용 부정식품 척결을 위한 수거검사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주관부서	민생사법경찰과	협조기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
담당팀명	수사2팀	연락처	042-270-4391

□ 추진배경

○ AI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민원 서비스 구축 사례 증가

* (주요사례) 행안부 행정상담 서비스(국민비서 구삐) , 국민연금공단 보험상담 챗봇 서비스 등

* (도입효과) 24시간 민원 질의응답 가능, 대화 기반 서비스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의약품 성분 혼입된 부정식품이 시민 건강 위협

-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이 질병치료용으로 불법 유통

* (주요사례) 2024년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에서 체중감량, 진통효과 의약품 성분 검출

□ 세부 추진사항

○ **AI 익명 신고 챗봇 구축** ***주관: 민생사법경찰과**

- AI 챗봇을 구축하여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openAI API(유료) 기능 활용을 통해 부정식품 관련 상담 및 제보 접수

○ **기획수거·검사 정례화** ***주관: 민생사법경찰과**

-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정례화

  *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광고 확인 및 제품 수거

-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 통해 시험검사 실시

  *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검사 시범 실시 예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6년도 수거검사 5건 실시
- 부적합(의약품 성분 포함) 확인 시 회수·폐기 및 판매차단
- 제조 및 유통업체 적발 및 수사개시(필요 시 관할 기관 통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증거 부족 시 수사 지연 • 이슈 발생 후 점검으로 대응 지연	• 정밀검사 증거 확보로 신속 수사 가능 • 기획수사로 선제 대응 및 부정식품 유통 차단 가능

□ '26년 소요예산

○ (예산액) 1,600천원

▶ **챗봇 open API 사용료**
: 600천원(월 50천원 * 12개월)

▶ **수거비용**
: 1,000천원(5품목 * 품목별 5개 * 개당 40천원)

□ 추진체계

○ AI 챗봇(신고접수) ↔ 민생사법경찰과(수거, 수사) ↔ 보건환경연구원(시험검사)



(그림) 협력체계 개념도

□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4월) 민생사법경찰과-보건환경연구원 실무자 협의
- (5월) **수거·검사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계획** 내부 결재
- (6월) AI 챗봇 구축
- (7~8월)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 (8~9월)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 (9~11월) 부정식품 확인 시 수사 개시(또는 관할기관 통보)
- (12월) 결과보고

□ 홍보계획

○ 월별 추진일정

- (6월) 부정식품 익명 신고 AI 챗봇 구축 홍보
- (12월) 부정식품 수거 및 검사 결과 발표

1-3 대전의 맛 선호도 조사

주관부서	식의약안전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위생정책팀	연락처	042-270-4874

□ 추진배경

○ 2000년 선정한 대전 대표음식(6味*), 시대 변화에 따른 재선정 요구 증가

* 대전6味: 삼계탕, 돌솥밥, 설렁탕, 숯골냉면, 대청호민물고기매운탕, 구즉도토리묵

○ 기존 전문가 중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 기반 정책결정 필요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정책 수용성 및 공감도 제고

□ 세부 추진사항

○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 기반 선호도 조사 실시**

- 온라인 기반 사전 시민 선호도 조사(1,000명)를 통해 도출된 상위 음식 후보군*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실시

* 후보군(11개): 빵,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국밥, 짬뽕, 기존 6味

- 온라인(시 홈페이지·전문조사기관) 및 오프라인(현장 스티커 조사) 병행 조사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설문조사 운영

○ **온라인 활용 시민 참여 확대 및 정책 반영 강화**

- 시 홈페이지 기반 간편 참여(로그인 없이 참여 가능)를 통해 접근성 제고
-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 활용 참여 유도

○ **현장 참여형 오프라인 소통 강화**

-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 고려하여 대면 참여 방식 운영
- 주요 거점(대전역, 중앙로, 터미널 등) 방문 시민·관광객의 의견 수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민 참여 인원 확대: (기존) 1,000명 → (목표) 4,000명 이상
-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대표음식 지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전문가 중심 정책 결정 구조 • 시민 공감도 및 체감도 낮음	• 시민 참여 기반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 구축 • 시민 공감형 정책 구현 및 신뢰도 향상

□ 관련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

□ '26년 소요예산

○ 대전 미식 홍보영상 제작: 80,000천원(시비 100%)

○ 맛 책자 제작: 15,000천원(시비 100%)

□ 추진일정

○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26. 3월)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위원회 심의('26. 3~4월)

○ 대표음식 '대전의 맛' 지정 및 정책 반영('26. 4월)

○ 미식 홍보영상 제작 및 후속사업 등 추진('26. 4~11월)

전문가 의견 수렴	⇨	사전 시민 선호도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후보 선정	⇨	(2차) 시민 선호도 조사	⇨	위원회 심의·지정	⇨	홍 보 · 후속사업
'25. 11~12월		'25. 12월		'26. 1월		'26. 3월		'26. 4월		'26. 4~11월

□ 홍보계획

○ '대전의 맛' 지정에 따른 미식 홍보영상 및 맛 책자 제작

○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1-4 PM(개인형 이동장치) 없는 시범거리 조성

주관부서	보행자전거과	협조기관/부서	대전경찰청
담당팀명	기반시설팀	연락처	042-270-6337

□ 추진배경

○ **(현황)**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 사례로 사고 발생

○ **(대안)**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근거하여 보행자가 밀집하는 구간에 대해 PM 통행금지 지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설치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PM 없는 시범거리 조성

○ **(대 상 지)*** 서구 둔산동 타임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 보행자 밀집 구간(대학가, 상가) 중 QR 설문조사, 상인회 의견 수렴 결과로 선정(대전경찰청)

○ **(사업내용)**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 **(사업기간)** '25. 11. ~ '26. 4.



서구 타임로(L=0.9km)



중구 으능정이(L=1.1km)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4월 내 시설물 설치 완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PM-보행자 간 충돌 위험 상존 및 보행자 불안감 고조 • 무분별한 주·정차 및 방치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가중	• PM-보행자 동선 분리로 보행 안전 확보

□ '26년 소요예산

○ 약 50백만원 (개소당 25백만원)

□ 추진체계

○ (대전경찰청) 집중단속구역 설정 및 PM 통행금지 단속·계도

○ (시)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시설물 설치

□ 추진일정

○ '25. 11.: PM 없는 거리조성 추진계획 수립 / 대전경찰청

○ '25. 12.: 시민 설문조사 및 상인회 의견 수렴 / 대전경찰청

○ '26. 1.: 최종 대상지 선정 / 대전경찰청

○ '26. 1.~2.: 시설물 설치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시

○ '26. 3.~4.: 시설물 설치 착공 및 완료 / 시

○ '26. 5.: 단속·계도 및 효과 분석 / 대전경찰청

□ 홍보계획

○ 사업 추진 보도자료 배포

1-5 주민 참여 기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고도화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식의약안전과
담당팀명	약품화학과	연락처	042-270-6791

□ 추진배경

○ 해외직구 화장품 이용 증가로 다양한 국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소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온라인 플랫폼 및 구매대행을 통한 화장품 해외직구 확대
- 외국어 성분표시 및 국가별 안전기준 차이로 인해 제품 안전성 판단 어려움 존재

○ 2025년 주민소통 플랫폼(대전시소)를 통해 시민 수요 및 구매 유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 검사 사업 추진

- 스킨케어 중심 화장품 안전성 검사 및 결과 공개
- 검사 결과 공개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 개선

□ 현황(문제점) 진단

○ 단년도 검사 중심 운영으로 시민 참여 데이터가 정책 서비스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

- 설문 결과의 일회성 활용으로 정책 연속성 부족
- 시민 체감형 정보 서비스로의 전환 미흡

○ 시민이 화장품 성분 및 안전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공 안전정보 제공체계 필요

○ 기존 데이터 활용하여 시민 참여→검사→결과 공개→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 구축

- 주민 참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참여 효능감 제고 필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시민 수요 데이터 기반 검사 고도화

- 2025년 시민 조사 결과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반복 설문 없이 기존 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 확대
- 스킨케어 중심에서 메이크업·헤어케어 등으로 검사 범위 확대

○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검사 강화

- pH,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6종 등 주요 항목 지속 검사
- 다국어 표시사항 및 위해성분 표시 적정성 점검 강화
- 국내 안전기준 대비 부적합 여부 중심 위해성 평가 수행
- 대전보건대학교 바이오특화센터와 협력하여 화장품 성분의 피부 세포 기반 안전성 평가 실시
- 중금속 함량별 세포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 구축

○ 시민 체감형 정보 제공 및 위해제품 유통 차단

- 검사 결과를 카드뉴스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
- 위해 제품 발생 시 신속 공개 및 유통 차단 조치 연계

○ 화장품 공공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안) 마련

-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앱 아이디어 기획
- AI 기반 공공서비스 관련 공모 및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화장품 검사 대상 품목 30% 이상 확대
- 검사결과 공개율 100% 달성
- AI 기반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앱 도입방안 1건 마련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스킨케어 중심 제한적 검사 • 성분 정보 이해 어려움 • 사후 대응 중심 안전관리 • 행정 중심 정보 제공 • 연구원 중심의 자체 검사	• 메이크업·헤어케어 포함 통합 검사체계 • 시민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기반 마련 •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 시민 참여기반 정책서비스 전환 • 연구원-지역대학 협업 기반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시험연구비 36,000천원(시비)

□ 추진체계

○ (시, 식의약안전과) 해외직구 화장품 수거

○ (연구원) 화장품 안전성 검사, 원료 적합 여부 확인 및 위해성 평가

○ (대전보건대학교) 인체 각질형성세포 활용한 중금속 안전성 평가

□ 추진일정

○ ('26. 1~3월) 사업 계획 수립 및 전년도 데이터 분석

○ ('26. 3~4월) 검사 대상 품목 선정 및 수거

○ ('26. 4~9월) 화장품 안전성 검사 실시 및 안전정보 앱 서비스 공모

○ ('26. 10~11월) 검사 결과 공개 및 홍보

○ ('26. 12월) 안전정보 앱 후속 활용방안 검토

□ 홍보계획

○ 보도자료, 시 SNS 등을 활용한 검사 결과 및 안전정보 제공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2-1 매장유산 가이드 AI 디-헤리티지

주관부서	문화유산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유산정책팀	연락처	042-251-4512

□ 추진배경

○ 기초지자체의 순환보직 체제에서 비전공 담당자들이 맡는 경우 재산권 제한과 직결되는 규제행정의 특성상 민원·행정쟁송 위험

○ 국가유산 규제업무는 사업 면적, 유적 포함 여부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절차가 기속 돼 자동화에 적합

□ 세부 추진사항

○ 생성형 AI를 코딩 도구로 활용하여 관계 법령의 판단 로직을 Python 기반의 자동판정 시스템으로 구현

○ 사업면적·유적 포함 여부 등 사업 정보 입력 시 법령 기반 절차 판정

○ 자치구 배부 후 수정·보완 추진

□ 기대효과

○ 비전공 순환보직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 적응 지원

○ 판단 오류 감소를 통한 민원·쟁송 리스크 완화

○ 국가유산 규제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비전공 순환보직 담당자의 쟁송 위험 • 민원 회신 편차	•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 적응 지원 • 근거 법령 제시 등 회신의 표준화

□ 추진일정

○ 배부(26. 2.)

□ 홍보계획

○ 기 홍보

- TV 2회(대전 MBC, TJB)
- 신문보도 19회

2-2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주관부서	도시정비과	협조기관	자치구
담당팀명	재정비촉진팀	연락처	042-270-6582

□ 추진배경

○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및 대전시 도시정비 정책 기조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 최근 공사비 상승 및 추진 반대 등으로 시공사 간, 또는 조합원간 분쟁 증가 추세

○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주민 이해도 제고 필요

*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현황('26. 3. 기준)

계	추 진 중								향후 추진 (예정구역)	준공
	소계	입안 제안	정비 구역	추진위	조합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공사중		
합계	**96**	**22**	**7**	**11**	**19**	**18**	**11**	**8**	**15**	**9**
재개발	83	19	5	11	19	13	10	6	6	6
재건축	13	3	2	0	0	5	1	2	9	3

□ 세부 추진사항

○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확립

- 공개주체: 자치구
- 공개시기: 매년
- 공개내용: 전년도의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련정보
  - ·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공사, 용역 등 계약의 계약금액
  -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중 발생한 이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 세부사항 법제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자치구별 획일화 되지 않은 정보공개로 주민 혼선 발생	• 일관된 정보공개에 따른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 / 자치구별 연 1회 정보공개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조례: 공개 대상 정보 범위 중 개정 필요시
- 시행규칙: 정보공개 서식 등 체계적인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26. 6.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검토

○ '26. 12.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홍보계획

○ 자치법규 개정 완료시 개정 알림 / 市 → 區 →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등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매년 정보공개

2-3 정보공개 확대로 정책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공

주관부서	소통민원과	협조기관/부서	전 부서
담당팀명	기록정보팀	연락처	042-270-4211

□ 추진배경

○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

○ 주민 누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책 신뢰도 및 지방정부의 투명성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비공개 기준을 확대해석하여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 부서 또는 유관기관간 소관 사무 이기주의적 이송(이첩) 행태로 인한 법정 처리기한 도과 등의 문제 발생

□ 세부 추진사항

○ (남용방지) 법령 등 정보 비공개 기준의 남용 방지를 위한 비공개 사유의 구체화 및 총괄부서와의 유기적 사전협조 체계 구축

○ (사전공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상시적 행정정보의 수시 현행화

○ (공개강화) 비공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및 신속하고 선제적인 공개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전정보 공표 수 : 1,105건
- 정보공개 강화 : 공개 결정기간 준수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사전정보 공표 건 현행화 부족 • 생산된 기록물의 보수적인 비공개 행태	• 사전정보 공표 수시 현행화 및 증가로 국민의 알 권리 향상 도모 • 정보의 공개 강화 및 결정기간 준수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각 부서별 사전정보 공표 업무 현황 재정비 : '26. 6. ~ 7월

○ 행정정보의 공개강화 및 결정 기간 준수율 : '26. 8. ~ 9월

□ 홍보계획

○ 대전광역시 누리집 상단 정보공개 항목 내 사전 정보 공표

○ 각 부서별 정보공개 강화 및 협조 안내문 수시 발송 및 홍보

2-4 대전상장기업지수 개발 및 공표

주관부서	기업지원정책과	협조기관/부서	대전테크노파크
담당팀명	기업지원정책팀	연락처	042-270-2642

□ 추진배경

○ 최근 증가세인 대전 소재 상장기업을 홍보하여 시민 인지도를 제고, 지역기업의 주가 성장 실적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수 개발

□ 세부 추진사항

○ (지수구성) 대전 본사 소재 상장 기업 (유가증권, 코스닥, 코스피)

- '26년 2월 공표시점 기준으로 지수 산정 / 시작점 : 1,000포인트

○ (지수운영) 대전시(대전테크노파크)

○ (지수공표)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링크 및 일일 1차례 공표

- 일·월·연도별 대전지수 및 시가총액, 기업별 주가 공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대전상장기업지수(DLX) 개발 및 공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개별 기업 성과 위주의 단편적 홍보로 도시 전체 경제력 체감 어려움 • 지역 상장기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경제지표 부재	• 대전상장기업지수(DLX)로 지역경제 성장을 직관적 수치로 시민에게 제공 • 투자자 유입·우수인재 유치, 외부 자본 기폭제 역할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대전상장기업지수 개발 및 운영비 880만원

* 26년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사업 대전테크노파크 출연금 예산 활용

□ 추진체계

○ (대전시) 대전상장기업지수 개발 및 운영 총괄, 홍보 등

○ (대전TP) 대전상장기업지수 개발 및 운영 관리 등

□ 추진일정

○ 대전상장기업지수 개발 ('26. 1월)

○ 대전상장기업지수 시범 운영 ('26. 2월)

○ 대전상장기업지수 개발 공표 ('26. 2. 6.)

○ 대전상장기업지수 운영 ('26. 2. 6.~)

□ 홍보계획

○ 대전상장기업지수 공포식 개최 ('26. 2. 6. / 대전컨벤션센터)

○ 언론사(일간지) 기획보도 실시('26. 2월 / 충투, 금강, 대전, 중도일보 등)

○ 대전시·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일일 공표('26. 2. 6. ~)

2-5 QR코드를 활용한 시설물(교량 등) 안전 정보 공개

주관부서	시설관리과	협조기관/부서	국토안전관리원
담당팀명	구조물점검팀	연락처	042-270-8914

□ 추진배경

○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으나 **정보 접근·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물(교량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하여,

○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 충족**을 통한 **지방정부의 행정 투명성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대전 3대 하천 교량(총 56개소) 중 **시민 체감이 큰 21개소** 시범 적용

- **QR명판**: 시민의 접근 및 확인이 용이한 교명주, 교각 등에 부착 / 위치, 방식 등을 고려한 크기 및 소재를 구성하여 제작·설치

  * 크기: 200mm(가로)x100mm(세로) / 소재: 철, 알루미늄 등 / 내용: 시설물명, QR, 관리기관 등

- **안전정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과 연계된 시설물별 QR코드를 통해 **시설물 정보(안전등급, 점검 이력 등)를 열람**

- **위험신고**: 시설물 안전 사고 등 즉각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112·119로 신고, 일반적인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유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설물 안전 정보 공개'** 강화

- 현장에서 개인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QR코드 촬영으로 **시설물 관련 정보(안전 등급, 점검 이력 등)**를 확인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신뢰 확보**

- 시민이 직접 시설물 **안전 상태, 점검·보수보강 이력, 안전신고**를 상시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안전 정보 열람'** 환경 조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민의 안전 정보 확인의 어려움 • 시설물 이상 징후 발견 시 정확한 위치 및 시설명칭 혼란 • 주기적인 점검으로 점검 주기 사이의 결함 발견 지체	• **QR코드 스캔**을 통한 **즉시 확인 가능** • **QR 위치 기반 정보**를 통한 **정확한 지점 식별 및 신속한 조치 가능** • 시민의 상시 접속 및 신고 기능 유도로 자연스러운 24시간 민관 합동 감시 체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행정사무경비-사무관리비(201-01)

- 현판 제작비용: 2,500,000원 ※산출기초: 50,000*50개

- 현판 부착비용: 500,000원 ※산출기초: 10,000*50개

- **총액: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추진체계

○ **국토안전관리원 ↔ 시설관리과** 세부 협의

- **국토안전관리원**: FMS 안전 데이터 연계 지원 및 표준 가이드 라인 제공
- **시설관리과**: 사업 계획 수립, 예산 확보, QR현판 제작 및 시설물 설치 등

□ 추진일정

○ 국토안전관리원 업무 협의 및 세부 추진계획 방침('26년 5월~)

○ QR코드 현판 제작 및 부착('26년 6월~)

□ 홍보계획

○ 대전광역시 **시 밴드(BAND)** 홍보 글 작성,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 (밀착홍보) 시 밴드 및 커뮤니티 활용, '우리 동네 교량 안전' 정보 확산
- (브랜딩) 언론보도를 통한 투명한 시설물 안전 정보 홍보 및 정보 공개로 시민 알권리 및 지방정부 신뢰도 제고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3-1 거주지 칸막이는 허물고 자긍심은 높이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역제한 폐지를 통한 예우 확대)

주관부서	보훈정책추진단	협조기관/부서	대전지방병무청
담당팀명	보훈정책추진단	연락처	042-270-0893

□ 추진배경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은 법령상 필수요건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무청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 단위의 병역명예 선양사업으로, 특정 지역 공로가 아닌 국가에 대한 병역이행 공로를 기리는 사회적 예우의 성격이 강함(특정 지역 공로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병역이행 공로)

○ 대전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예우 대상이 해당지역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병역명문가 우대 사항>

o 병역명문가 포상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지자체별)
o 국가,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시 예우 /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 면제 또는 할인
o 병역 명문가 '밀리패스' 복지혜택 부여(기차, 영화, 쇼핑 등) 할인(2025~)
- 기차할인 예약(KTX최대 20%할인)
- 영화관람권 할인(롯데시네마 등 최대 30% 할인)
- 외국어 강좌 등 할인(토익 인강 등 60% 등)
- 상품할인(각종상품 할인구매) * 군 복지시설, 문화·레저시설, 병·의원 진료비 등 감면

□ 사업개요

○ (법적근거)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제82조의4(병역명문가포상및예우)

○ (선정 대상)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 형제 ·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

*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 포함

○ 지역별 병역명문가 가문 및 병역이행자 현황 * 대표자 주소지 기준

구분	전 국	대 전	충 남	세 종
가문(수)	**23,237**	692	580	168
이행자(명)	**112,202**	3,411	2,859	832

□ 세부 추진사항

○ 조례 개정 완료 및 제도적 기반 마련 (2026. 4. 10. 공포)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역제한 폐지

○ 관계기관 협업체계 형성

- 市-대전지방병무청 업무협의를 통해 병역명문가 우대 사업 정보공유 활성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성과 : 수혜 가능 대상자 3,411명 → 112,202명으로 확대(전국 단위 서비스)
- 비용 : 예산 증액 없는 제도 개선만으로 보훈 정책 만족도 극대화
- 확산 : 전국 지자체에 '거주지 제한 폐지' 표준 모델 확산 유도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병역 의무는 '국가'에 대한 헌신임에도, 예우는 '거주지'라는 틀에 갇혀 타 지역 방문 시 혜택이 단절되는 소외감 발생. • 지자체별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현장에서 거주지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민원 마찰 빈번	• [규제혁신] 조례 개정을 통해 '거주지 제한' 관행 전격 폐지. • [협업모델] 대전시-대전지방병무청 간 데이터 공유 및 '밀리패스' 앱을 통한 디지털 예우 체계 구축. • [개방성] 대전의 공공시설(주차장, 박물관, 휴양시설 등)을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에게 전면 개방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26. 4. 10. 시행)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역제한 폐지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 대전광역시(주관): 조례 개정 총괄, 공공시설(주차장 등) 감면 지침 시달

○ 대전지방병무청(협업): 병역명문가 현황 공유, 전국 병역명문가 대상 대전시 우대 혜택 홍보 및 밀리패스 연계

□ 추진일정

○ 조례 개정 완료 및 공포: 2026. 4. 10.

○ 전국 단위 수혜자 대상 집중 홍보: 2026. 5월 ~ 지속

□ 홍보계획

○ 홈페이지, 관계 기관(병무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병무청 홈페이지 및 전국 지방병무청 네트워크 활용, 밀리패스(MiliPass) 앱 내 대전시 우대 혜택 팝업 공지 등

3-2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 지원

주관부서	과학협력과	협조기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팀명	과학협력팀	연락처	042-270-0312

□ 추진배경

○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중심도시' 대전으로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 필요

○ 과학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우수인재 유입 및 과학 수도 대전의 정체성 강화 기여

□ 세부 추진사항

○ **(포 상 명)** 대전 우수과학기술인상

○ **(훈 격)** 대전광역시장

○ **(포상규모)** 年 2명(포상 분야별 1명)

○ **(선정대상)** 대전 거주 현직 과학기술인*중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인

○ **(포상분야)**

부 문	정의 및 주요평가 기준	성과 예시
① **연구개발 (R&D) 성과**	‣ 연구개발 내용의 창의성, 혁신성, 차별성 및 경쟁력을 갖춘 가시적 성과 업적	‣ 기초 및 응용연구 성과 ‣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 및 연구 성과 ‣ 연구 성과의 지속성 및 개인 기여도
② **기술사업화 성과**	‣ 연구성과를 기술개발에 적용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기여한 우수한 성과	‣ 기술이전·출자, 라이선스 등 사업화 실적 ‣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시장 진입 성과 ‣ 기술 기반 창업 또는 기업 성장 성과

○ **(포상자 우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연구장려금 지급**	ㅇ **(선정인원)** 연 2인 ㅇ **(지급금액)** 1인당 2천만원(연 1,0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ㅇ **(지급절차)** 수상 후 연차별 연구장려금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거 지급 ㅇ **(소요예산)** 1년차 2천만원, 2년차부터 4천만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② **우수 과학기술인 인증패 제공**	ㅇ **(내용)** 우수과학기술인 인증패 등 제작 및 수여 ㅇ **(수여대상)** 2인 
③ **수상자 및 연구성과 홍보**	ㅇ **(내용)** 시정 소식지, 전광판 홍보, 대전시 공식 유튜브·SNS 인터뷰 제작 홍보 ㅇ **(효과)** 과학자의 삶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홍보로 대중 인지도 제고
④ **과학기술 분야 강사 초빙**	ㅇ **(내용)** 시민대상 강연 및 공무원 대상 특강 시 강사 초빙 - 과학문화 행사, 청소년 진로교육에 초청 연사로 위촉 ㅇ **(효과)** 대전시가 인정한 과학자로 인식되는 계기 제공
⑤ **핸드프린팅**	ㅇ **(내용)** 수상자의 업적을 상징하는 핸드 프린팅 제작, 공공 공간 전시 ㅇ **(효과)** 과학기술인의 성취를 시각적 상징물로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대전 우수과학기술인 선정 2명(포상 분야별 1명)
- 시상식 개최, 연구장려금 지급 등 포상자 예우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및 동기부여 한계 •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대한 발굴·보상 미흡 • 우수 연구 성과의 대외 확산 및 홍보 부족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인식 부족	• 과학기술 인재 **사기진작** 및 **지역 정착 유도** •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성과 가시화** • 우수 과학기술인 포상을 통한 **롤모델 확산** • 지역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26년 소요예산

○ **(총 사업비)** 30,000천원

세목	산출내역	예산	비고
연구장려금	* 수상자 10,000천원×2인	20,000천원	
회의행사비	* 심사수당	5,500천원	
일반운영비	* 우수과학기술인 인증패 제작 = 500천원×2인 * 홍보비(포스터, 라디오 광고 등) = 3,500천원×1식	1,000천원 3,500천원	

□ 추진체계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모집공고 및 홍보													
3	후보자 접수													
4	사전 서류심사(1차 심사)													
5	전공 분야 심사(2차 심사)													
6	후보자 공개검증													
7	종합심사 및 의결(3차 심사), 수상자 결정													
8	수상자 발표, 시상식 개최													
9	연구장려금 등 포상자 지원													
10	사업정산													

□ 홍보계획

○ 대전 우수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 홍보포스터 및 보도자료 배포, 라디오 스팟광고 등 홍보(5~7월)

○ 대전 우수과학기술인상 선정 및 시상식 개최 홍보(11~12월)

3-3 도로공사 현장민원 사전점검 및 주민소통 강화

주관부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설1과	협조기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담당팀명	건설3팀	연락처	042-270-8791

□ 추진배경

○ 도로공사는 시민 통행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쳐 소음·진동·통행불편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

○ 공사 관련 문의가 담당부서, 현장, 시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주민이 문의처를 쉽게 알기 어려움

○ 공사현장 내 단일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추진사항

○ **현장 소통창구 일원화**

- 공사안내판에 담당부서 및 현장대리인 연락처, QR코드를 함께 표기
- QR코드를 통해 공사 개요, 주요 일정, 통행 변경사항, 민원 제출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민원 접수체계 일원화를 통해 문의·민원에 대한 신속처리체계 마련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공사 관련 문의처가 분산돼 주민 혼선 발생 • 민원 전달 및 회신 지연으로 주민 불편 가중	• 민원창구 일원화로 주민 편의 향상 • 공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전달 및 처리 가능

3-4 [대표과제] AI 기반 「대전식품검사봇」 서비스의 공공 AX 전환 및 고도화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식의약안전과, 소통민원과, 정보화정책과,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담당팀명	식품분석과	연락처	042-270-6814

□ 추진배경

○ **(현 황) 지자체 최초 AI 기반 「대전식품검사봇」 운영**

-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능형 대화 엔진을 개발하여 카카오 채널에 탑재한 비대면 자가품질검사 안내 봇

○ **(문 제 점)**

- **(민원인)** 검사주기 알림톡 수신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진입하는 식품업체의 경우 '대전식품검사봇' 인지도 부족
- **(공무원)** 개별 상담문의 전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접수 및 자가 품질 관련 고시 개정 안내에 따른 서비스 시간 소요

○ **(개선방향)**

- 사용자 확장 및 기존 AI 시스템을 활용한 공공 AX 모델 전환 모색

□ 세부 추진사항 (주요내용)

○ '대전식품검사봇' 접근 절차 간소화

- 검사주기 알림톡 수신절차 단순화 및 검사항목 개정고시 반영
  * 기존 개발 업체에 요청 (2026. 3월 말)

○ 사용자 확장을 위한 홍보 다각화 노력

- 신규 진입하는 식품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업체 가입 독려
  *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 방문을 통한 대전식품검사봇 안내 등
- 자가품질검사 의뢰업체 대상 만족도 피드백 통한 소통채널 확보

○ 기존 AI 시스템 고도화로 공공 AX 모델 전환 시도

- 수수료 결제 등 비대면 접수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
- 자가품질검사 관련 법령·고시 개정시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
- AI 전화(음성) 서비스 및 자연어 처리 가능한 챗봇 응답서비스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 AX 과제 및 K-Gov AX 모델 발굴에 제안
    : 총무과-1544(26. 2. 27)호 및 식의약연구부-1011(26. 3. 23)호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검사봇' 가입자: 1000명 이상/ 관내 업체(약 3000여 개소) 대비 30% 이상
- '검사알림주기' 설정자: 300명 이상/ 가입자 대비 30% 이상
  * '대전식품검사봇' 접근 절차 간소화 선행시 가능
- 대전식품검사봇 홍보 강화 1회 이상/ 자치구 위생부서 및 정보화정책과 등

○ 기대효과

시행 전 (AS IS)	시행 후 (TO BE)
• 민원인(영업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질의 • 담당자: 각 민원에 대해 개인 경험 및 법령 확인에 따른 개별 답변 (응답지연 및 안내편차 발생)	• 접근절차 간소화로 신규 가입자 확대 • 표준화된 동일 기준 안내 • 모바일 기반 24시간 AI(음성포함) 상담 • 민원서비스 고도화 및 만족도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알림톡 발생 예산 600천원: 행정사무경비-사무관리비/시비 100%

○ AX 고도화 예산 2억: 관련부서 협조 및 공모를 통해 확보 예정

□ 추진체계

○ **(연구원)** 사용자 확장을 위한 홍보 다각화 및 시스템 고도화 제안

○ **(소통민원과) AI** 활용하여 민원 신청·접수·처리 까지 단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품검사봇」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정보화정책과 및 업체)** 서버 지원 및 '검사봇' 접근 절차 간소화

○ **(시·구 식품위생부서)** 신규 진입 식품업체에 '검사봇' 안내

□ 추진일정

○ 반기별 추진일정

- (상반기) 관내 업체 활용도 현황 분석 및 자치구 방문
- (하반기) '식품검사봇' 접근 절차 간소화 및 고도화 등 성과모니터링

□ 홍보계획

○ 대전식품검사봇 사용자 확장을 위한 다양한 경로 활용

- 자치구 위생부서 방문 및 보도자료, SNS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자가품질검사 의뢰업체 대상 적극 안내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 시 홍보 방법 모색

3-5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자치구 환경과,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담당팀명	폐기물분석과	연락처	042-270-6871

□ 추진배경

○ **(현 황)** 대전시 오수처리시설 1,700여 개소 등록(2025년 말) 운영중

- 주로 소규모* 시설에서 수질 부적합 발생 * 1일 처리용량 50m³ 미만

○ **(문제점)** 소규모 시설은 시설관리인 선임의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 및 자체개선이 어려움

○ **(대응방안)** 부적합 원인분석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4항(방류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 세부 추진사항

○ 기술지원 체계 마련

- (협의체 구성) 3개 기관 / 연구원, 자치구 환경과,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어려움 겪는 **현장 방문하여 처리시설 컨설팅 진행**

○ 기술지원 절차

기술지원 요청	기술지원 접수	**현장 방문 및 시설진단**	시설개선	개선 완료 후 시료채취·검사
건축주	구청→연구원	**- 연구원 - 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기술인) - 구청 담당자**	건축주	- 구청 - 연구원

○ 기술지원 사항

- 시설점검표에 따른 운영 관리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관리 매뉴얼 배포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기술지원 사항 점검 및 반영

○ 학습동아리 운영 * **2026년 시 학습동아리 선정**

- (동아리명) **도전! 오수 배출 Zero**
- 전문가 자문, 문헌조사 및 주기적 간담회를 통한 구성원의 기술역량 제고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수질 부적합 **시설 개선율 90% 이상** 달성

- 시설 개선 전·후 방류수 수질검사로 평가
- 청소 등 단기적 개선 아닌 운영방식을 바로잡는 근본적 문제해결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기존 지도·점검은 처리시설 운영 현황 파악에 그침 • 방류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 등 환경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과중	• 현장 직접 방문 및 개선방안 제시로 시민 어려움 해소하는 맞춤형 행정 시행 • 시설 관리요령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운영 역량 높임 • 근본적 문제해결을 통한 오염원 차단으로 하천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효과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대전시 관계기관(자치구청, 녹색환경지원센터)과 협업으로 추진

- (연구원) 지원사업 총괄 추진, 수질검사로 시설개선 효과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 (자치구청) 기술지원 신청 접수
- (녹색환경지원센터) 컨설팅 전문 기술인력 지원

□ 추진일정

○ 기술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26. 3월

○ 대상시설 접수 및 기술지원 현장 방문: '26. 4월 ~ 10월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26. 11월 ~ 12월

□ 홍보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SNS, 연구원 누리집 게시 등

○ 유관 부서에 최종 결과 보고서 공유로 하천 오염원 관리 정책 반영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4-1 한밭도서관 다문화기관방문 독서 지도 프로그램「다독다독」

주관부서	한밭도서관 자료운영과	협조기관/부서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팀명	대출팀	연락처	042-270-7503

□ 추진배경

○ 다문화가정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보편적 문화 향유권 확대

○ 다문화가정 보호자 주도의 가정 내 독서 코칭 역량 강화 및 자녀 성장 지원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2026년 다문화기관방문 독서 지도 프로그램 「다독다독」

○ (기 간) 2026. 4. 3. ~ 5. 29. / 총 7회

○ (대 상) 성장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보호자

○ (내 용) 도서관 안내, 그림책 읽기 및 도서 연계 활동, 동화구연 방법 지도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독서 지도 프로그램 1개 강좌, 7회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다문화가정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저조 • 자녀 독서 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한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저조	•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다문화가정의 도서관 이용률 제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지도법 함양 및 독서와 교육을 통한 한국어 능력 향상

□ '26년 소요예산

○ (총예산액) 1,250천원

□ 추진체계

○ (한밭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강사 파견, 수당 지급

○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소 지원 및 참여자 모집, 홍보

□ 추진일정

○ ('26. 1. ~ 3. 31.) 강사 섭외 및 강의 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 ('26. 4. 3. ~ 5. 29.) 프로그램 운영

□ 홍보계획

○ (언론 홍보) 보도자료 배포

○ (지면 홍보) 한밭도서관 소식지 게재

4-2 대전 공공도서관 AI·SW특강 추진

주관부서	한밭도서관 자료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팀명	도서정책팀	연락처	042-270-7453

□ 추진배경

○ 디지털·AI 전환 가속화로 노인층의 정보 접근 격차가 심화되며, 단순 이용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

○ 지역 거점대학교의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협력 기반 서비스 확충 필요성 증대

□ 세부 추진사항

○ 대학협력 기반 운영체계 구축

- 충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의「시민과 함께 만들고 발전시키는 AiTogether SW·AI 가치확산 사업」연계하여, 전문강사, 교육과정, 실습 인프라를 공공도서관과 공동 활용하는 협력모델 운영

○ 대상별 맞춤형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시행

- (노인 대상) 각종 콘텐츠(이미지·음원·영상) 제작, 디지털 범죄 예방, 전자자료 이용방법 등 일상 활용 중심의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 (직원 대상) 프롬프팅 역량강화, 정형문서 자동화, 문화프로그램용 도구 활용, 안전한 AI 사용 가이드라인 등 업무 관련 교육

○ 단계별 확대 전략

- (1단계) 한밭도서관 시범 운영을 통해 커리큘럼 고도화
- (2단계) 결과 분석 후 관내 타 공공도서관 표준 모델 전파 및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노인 AI교육 수료 후 만족도 조사 80% 이상 유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노인층 디지털 소외 및 정보 격차 심화	• 디지털 활용 역량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 총괄: 한밭도서관 자료정책과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운영: 공공도서관 / 프로그램 실행, 현장 피드백 수집

○ 협력기관: 충남대학교(전문강사 지원, 교육 운영)

□ 추진일정

○ 충남대학교 업무협의, 세부커리큘럼 논의('26. 1.)

○ 시범 도서관 대상 노인, 직원 대상 AI 교육 추진('26. 4.)

○ 운영 성과분석 및 프로그램 보완('26. 5.)

○ 관내 타 도서관 확대 운영('26. 6. ~)

□ 홍보계획

○ 도서관 홍보매체 활용: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 성과 확산 홍보: 시범운영 결과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

4-3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실험실』 운영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협조기관/부서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관내 노인복지관
담당팀명	미생물과	연락처	042-270-6787

□ 추진배경

○ **(고위험군 보호의 시급성)**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어르신은 감염병 이환 시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집단시설 내 대규모 발생 위험 상존

○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환자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 감지 중심에서 잠재적 위험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능동적·선제적 예방으로 전환

○ **(과학적 방역 지표 마련)** 시설별 방역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마련하여 현장 밀착형 실천 방안 제시

*감염 취약시설 이용행태 변화
- (어린이집) 시설(민간,가정) 및 이용 아동(저출산은 감소하고 있으나, 야간 연장 보육 및 공공 보육시설 이용 증가
- (노인시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돌파, 노인복지시설 매년 3,000개 이상 증가

⇒ 집단생활을 하는 감염 취약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 안전서비스 중요성 대두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위험군(영·유아, 만65세이상 어르신) 이용시설 감염병 예방 실태조사
- (사업기간) 2026년 연중, 감염병별 취약시기 집중 실시
- (사업대상) 공공이용시설(어린이집 및 노인복지관) 10개소
- (사업추진) 감염병 유행시기, 보육·요양 시설 특성별 맞춤형 감시체계 운영
- (수행체계)

사전준비	현장확인	검체채취	결과분석·환류	사후관리
· 일정조정, 안내 · 검체채취 준비	· 체크리스트 작성 · 검체채취지점 파악	· 환경표면 Swab · 검체리스트 작성	· 감염병별 분석 · 검사결과 공유	· 감염병 검출 시 안내 · 소독 후 재검사 유도

○ 세부 추진내용

-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검체 채취부터 결과 피드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시설의 이동 및 행정 부담 제로화)
- [데이터기반 모니터링] 감염병 취약 시기별 집중 관리로 돌봄 공백 사전예방

◈ 감시대상 감염병

구분	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감염증
병원체	급성호흡기바이러스 9종	엔테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시 기	봄, 겨울	봄	봄, 겨울
시 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 [맞춤형 방역 솔루션] 결과통보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소독 가이드 제시
- [실효성 검증] 성과 분석 평가 및 서비스 이용자 피드백 수집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취약성 대응) 감염 취약 고위험군 위험시설 선제적 감시체계 운영
- (방역 표준화) 시설별 환경오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객관적 방역지표 수립
- (만족도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시설의 방역 만족도 및 체감 안전도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설 자체적 관리(청결유지 및 소독) • 감염 발생 후 사후수습 및 확산차단 • 막연한 불안감 상존 • 감염병 발생 시 대응	• 데이터 기반 맞춤형 방역관리 • 잠재 병원체 선제적 차단으로 감염 리스크 최소화 •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심 보육 · 요양환경 조성 • 예방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복지 실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시험연구비(위해 미생물 분석-연구개발비)

□ 추진체계

○ 총괄부서: 감염병연구부, 사업방향 및 전략 수립(기획 및 로드맵 설계, 성과 관리)

○ 실행부서: 3개분과(호흡기, 수인성, 엔테로)간 공동체계 구축· 운영

○ 유관부서: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관 담당부서와 협력, 대상 선정 및 참여

□ 추진일정

○ 사업안내 및 협조요청(1~2월): 사전안내(리플릿 제공), 현장 점검

○ 추진계획 수립(3월): 공동 연구자 간 사업추진 조율, 사업계획 수립

○ 현장 집중서비스(3~11월): 찾아가는 실험실 운영(고위험시기 집중 실시)

- 현장실사(체크리스트) 및 검체채취, 검사, 결과환류
- 실무자 회의(수시; 사업추진 현황 점검, 진행상황 공유 등), 만족도 조사(11월)

○ 성과결과 및 공유(12월): 성과분석 및 평가, 결과보고, 유관기관 공유

□ 홍보계획

○ 홍보자료: 예방감시 안내 리플릿, 홍보영상, 기고문 등 제작 및 배포

○ 현장소통: 조사결과 및 방역 팁을 담은 맞춤형 정보제공

4-4 관리취약시설(노인복지관)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체계 구축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시 환경정책과, 시 노인복지과
담당팀명	생활환경과	연락처	042-270-6851

□ 추진배경

○ **(현황)**

-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초과)
- 노인의 교육·학습활동 참여기관 중 노인복지관 이용 비율은 28.1%로 주요 여가·교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노인 교육·학습활동 참여 기관(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3.11.)

교육·학습활동 참여기관	시·군·구/읍·면·동	노인복지관	매체활용	경로당	평생교육센터	민간문화교육기관	종교기관	공공문화교육기관	대한노인회	학교
비율(%)	29.8	28.1	26.7	21.0	14.2	9.8	5.0	3.9	3.8	0.6

-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일상생활 및 건강과 밀접한 공공성이 높은 이용시설**로서, 이용 증가에 따른 환경관리 중요성 지속적 확대

○ **(문제점)**

- **노인복지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 시설군에 포함되지 않음**
  → 다수가 이용함에도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 대상 시설군에 노인요양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노인복지관은 관리 시설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부 추진사항

○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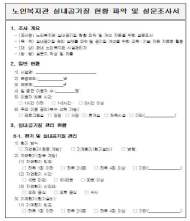
- 관내 노인복지관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 및 현황 데이터 구축**
  * (분석주기) **계절별 연 4회 측정** 및 분석으로 실내공기질 현황 파악
  * (측정항목) **8항목**(PM-10, PM-2.5, CO, CO_2, HCHO, 총부유세균, NO_2, 라돈)
- 이용자(노인) 및 종사자 대상 실내공기질 설문조사 실시
- 측정 데이터와 이용자 의견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 개선요인 도출





○ **(맞춤지원)**
- 환기, 청소, 시설 운영 등 **각 노인복지관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제도개선)**
- 이용자 의견 및 현장 사례를 반영한 법적기준 마련 및 개선사항 도출
- 중장기적으로 법적 관리대상 포함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관내 노인복지관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100% 실시**
-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개선율 90% 이상 달성** ※ (기준) 유사시설 기준 적용

○ **(기대효과)**
- 노인복지관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강화**
- 노인이용시설 관리 시설군 확대 및 개선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시설 간 관리 수준 편차 해소** 및 균형 있는 환경관리 체계 구축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 사각지대 • 시설 간 관리 수준 편차 발생	• 노인복지관 주기적 관리로 건강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 측정 및 자문을 통한 맞춤형 개선으로 관리 수준 역량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보건환경연구원	시 환경정책과	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수행 ·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보고서 작성 및 정책자료 제공	· 실내공기질 정책 연계 · 실내공기질 제도 개선 검토 · 유관기관 협업 행정적 지원 총괄	· 노인복지관 운영 총괄 · 노인복지관 조사 협조 요청 · 공기질 관련 시설 개선 등 지원	· 조사 및 측정 협조 · 시설 운영관리 및 개선사항 적용 · 이용자 안내 및 의견 제공

□ 추진일정

구 분	계획 및 선정	▶ 실내공기질 검사	▶ 교육·기술자문	▶ 결과·정보공유
주요내용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 대상시설 및 지점선정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분석 · 계절별 정기 측정 실시 · 데이터 축적 및 관리	· 시설관리자 교육 실시 · 현장 맞춤형 자문 제공 ·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 지원	· 결과 종합 분석 및 평가 · 개선사항·정책 자료 도출 · 유관기관에 결과 공유
추진일정	'26년 1월	'26년 1월~11월	'26년 6월~11월	'26년 11월~12월

□ 홍보계획

○ 시 및 연구원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결과 공개 및 홍보

○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대상 홍보·교육 및 컨설팅 자료 제공

○ 유관기관 대상 공문 발송을 통한 정책자료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4-5 여성복지시설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지원

주관부서	여성가족원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여성가족원	연락처	042-270-7626

□ 추진배경

○ 외부노출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자립 지원

- 관내 여성복지시설 현황

(기준월: 2026년 3월)

계	한부모가족시설	여성생활시설(쉼터)*	가족센터
15개소	6개소	4개소	5개소

* 여성생활시설(쉼터): 성매매피해, 성폭력피해, 가정폭력보호시설 등(비공개시설)

- 찾아가는 특강 운영 현황

구 분	2023	2024	2025
교육 대상	12개소, 138명	8개소, 94명	11개소, 126명
교육 강좌	18개	9개	14개

* 매년 2기 운영 / 교육대상 및 강좌수 1, 2기 합산 수치

□ 세부 추진사항

○ 찾아가는 특강 운영

- (운영기간) 연 2회 / (1기) 5월 ~ 6월 (2기) 9월 ~ 10월
- (운영절차)

시설별 교육수요 조사 ➡ 시설별 맞춤 교육계획수립 ➡ 교육결정 통보 ➡ 시설방문 의견수렴 ➡ 강사파견 교육운영 ➡ 수료 및 설문

- 시설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형 강의** 제공
-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지원** 및 교육 효과성을 위해 수강생 참여 독려
- 수강생의 요구와 관심사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기수별 설문조사 실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설 수 대비 **기수별 평균 참여 시설수 저조**하여 적극 홍보 및 강의 조율을 통해 **교육대상 시설수 10% 확대(11개소→12개소)**

  * 관내 시설 수: 15개소 / '25년도 교육대상 수: 11개소 *기수별 평균 5.5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강의 단순 연계 지원	• 시설에 홍보를 통한 참여 독려 및 적극적인 강의일정 조율로 보다 많은 시설에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하여 **여성가족원 내방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설 입소자에게 교육 접근성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약 9,960천원(시비100%)

* 산출기초: 강사수당 개소당 830천원 × 12개소
* 예산항목: 시민교육-교육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추진체계

○ 해당 없음

□ 추진일정

추진 단계	제1기	제2기
1. 홍보 및 수요조사	3월 ~ 4월	7월 ~ 8월
2. 강의 조율 및 운영계획 수립	4월	8월
3. 특강 운영	5월 ~ 6월	9월 ~ 10월
4. 수강생 설문조사	6월	10월

□ 홍보계획

○ 시설별 맞춤형 홍보 및 담당자와 소통 강화(유선 또는 대면)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5-1 2026년 대전 전세사기 ZERO 로드맵 추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기관/부서	홍보담당관 등
담당팀명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처	042-270-6522

□ 추진배경

○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피해자 약 86%가 20~30대(26. 3. 기준)

* 연령대별 20대(1,644명/39.2%), **30대(1,970명/47.1%)**, 40대 이상(577명/13.7%)

○ 계약 실무 지식 부족이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전 중심 교육 및 사례별 대처법 홍보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2026 청년 집探(탐) 교육 운영 및 민·관·연 협업체계 구축

- 전세피해 예방에 특화된 실무 교육 과정을 교육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연구원 등)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내 전세피해 예방교육 과정 편성
-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등기사항 증명서 분석 등 실습을 통한 자가진단 역량 강화

○ 안심계약 디지털 홍보

-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계약 상황별 대처법 및 피해사례를 꿈돌이 캐릭터와 연계한 숏폼 영상 제작
- 전세피해 예방 수칙을 담은 카드 뉴스 제작·배포

○ 밀착 홍보 강화

- 전입 및 혼인신고 창구에 예방 리플렛과 체크리스트 상시 비치
- 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홍보 사각지대 해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실무 역량 강화) 등기부 등 공적장부 열람 및 권리관계 판독법과 실거래가 시스템등을 활용 전세가율 산정
- (법적 보호 장치 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법적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이해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활용 능력 강화
- (안전한 계약 체결) 임차인 보호 특약 설정 및 및 임대인의 채무관계 확인을 통한 계약 안정성 확보
- (대응체계 구축)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대응절차 숙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등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중개사가 보여주는 부분만 확인하거나 서류의 의미를 정확히 모름	•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분석을 통해 위험징후 식별가능
• 표준계약서 위주로 특약 요구 주저함	• 당일 근저당 설정 금지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 당당히 요구
• 구체적 전세사기 수법을 모름	•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한 고위험 매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차단
• 문제 발생시 당황하며 2차 피해 발생 위험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등 공식적인 법적 대응 절차 실행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추진체계

○ (토지정보과) 추진계획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홍보담당관) 시 공식 유튜브/SNS 활용 홍보, 숏폼 영상 배포

○ (자치구) 민원창구 체크리스트 등 비치 및 배포 협조

○ (교육기관) 대전연구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교육 주관기관 자체 교육프로그램 내 전세피해 예방 교육 편성 협조

□ 추진일정

○ 청년집探(탐) 피해예방 교육 운영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6. 3. ~ 9. (7회 운영)
- 대전청년내일재단: '26. 9. (4회 운영)
- 대전연구원 대전경제교육센터: 실무협의회('26. 4.) 이후 일정 확정

○ 안심계약 디지털 홍보

- 공감형 숏폼 영상 제작 및 배포: '26. 5.
- 피해 예방 카드 뉴스 제작: '26. 7.

○ 행정접점 밀착홍보: 연중

□ 홍보계획

○ 시 공식 유튜브, SNS 활용 숏폼 영상 배포 등 홍보

○ 교육주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홍보 연계

5-2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리 강화방안 마련

주관부서	회계재산과	협조기관/부서	본청 및 사업소 등
담당팀명	계약팀	연락처	042-270-4301

□ 추진배경

○ 관급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 등 문제 지속 발생

○ 소규모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등의 체불 문제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존재

○ 임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 관급공사 적용 대상의 하한금액을 폐지하여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관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체불 예방

○ **(건설근로자 노무비 체불방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명문화하여 노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 사전 차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발생률 감소
-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 지급 투명성 제고

○ 기대효과

-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예방을 통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 권익 보호
- 소규모 공사를 포함하여 전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해소
-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전부개정

- 관급공사 대상 하한금액(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등) 삭제(제2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규정 신설(제8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 신설(제9조)

□ 추진일정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개정 시행 : '26. 5월

5-3 농촌지역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주관부서	자연재난과	협조기관/부서	5개구
담당팀명	재난상황팀	연락처	042-270-5993

□ 추진배경

○ 기존 마을방송을 위한 자동음성통보장치는 외부 스피커 시설로써, 청취자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방송 내용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

- (예시 1) 마을 주민이 잠시 해당 지역을 벗어난 경우 마을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 (예시 2) 날씨와 주변 소음 등의 영향으로 내용 인식이 어려운 경우

□ 세부 추진사항

○ 음성·문자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 앱,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송·수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 다채널 스마트 마을방송(음성, 문자, 앱 알림 등) 발송
- 지역·대상별 수신자 목록 관리 및 선택 발송 기능
- 문자로 내용을 작성하고 전송처리 시 음성으로 변환하여 방송
- 스마트 마을방송 처리 결과 확인 및 재발송
- 주민 참여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대상 교육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간, 장소, 주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휴대폰 전화, 휴대폰 문자, 앱 알람,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로 방송
- 기존 자동음성통보 장치 연계
- 마을방송 발신자(통장 등)는 주민의 방송 수신 여부 확인 가능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수신) 단일 채널(자동음성통보장치)로만 마을방송 청취가 가능하여 방송을 놓치거나 내용 인식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 • (발신) 방송 후 주민들의 방송 수신 여부 확인 불가능	• (수신) 다채널(휴대폰 전화, 문자, 앱, 알림톡, 자동음성통보장치)로 방송 청취가 가능하여 놓친 방송도 재청취 가능하며 내용 인식 용이 • (발신) 방송 후 주민들의 방송 수신 여부 확인 가능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3억원

○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용역 249,920천원

○ 클라우드 사용료 및 통신료 : 48,280천원

○ 제안서 평가 및 과업심의 수당 : 1,800천원

□ 추진일정

○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개발 및 구축('26. 5월 ~ 9월)

○ 자치구 수요조사 및 마을방송 신청자 홍보('26. 5월 ~ 6월)

○ 시범 운영 수행('26. 8월 ~ 9월)

○ 대전시 농촌마을 전지역 보급 실시('26. 10월 ~ 12월)

□ 홍보계획: 관리자(자치구·동 직원, 통장), 사용자(주민) 교육

○ 관리자(자치구·동 직원, 통장), 사용자(주민) 교육

5-4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주관부서	질병관리과	협조기관/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당팀명	건강증진팀	연락처	042-270-4843

□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진행 및 고령자 가구 비율 증가

- '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로,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고령화 심화로 의료·돌봄 수요 증가 및 노인 경강관리서비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필요

→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통합하여, **'26년부터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확대·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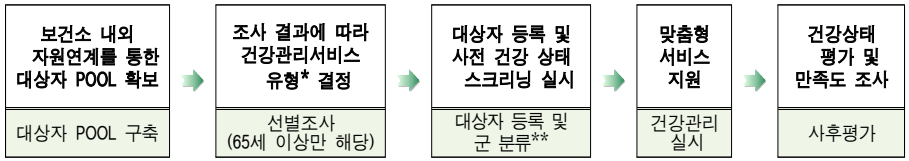
□ 세부 추진사항

1 서비스 대상자·내용

구분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65세 이상 노인** 중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
내용	· **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6개월 기준 1~16회)** *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 3개월 이내 8회 이상 - 정기관리군: 3개월마다 1회 이상 - 자기역량지원군: 6개월마다 1회 이상	· **비대면 서비스 제공(6개월 기준 2회 대면)** · **기기 활용(스마트폰 앱 '오늘 건강')** * 허약(노쇠)평가 결과에 따른 군분류 - 건강군: 월 1회 모니터링 - 전허약군: 주 1회 모니터링, 월 1회 비대면 컨설팅 - 허약군: 주 1회 모니터링, 월 2회 비대면 컨설팅

* 선별조사를 통해 대면(방문건강관리) 또는 비대면(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분류

2 서비스 제공절차



* 건강관리서비스 유형: 방문 또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타 보건소 서비스 등

** 군분류: (방문)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AI·IoT)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노인 대상 노쇠(허약)평가 수행률: 3.0%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방문건강관리와 AI·IoT 사업이 분리 운영되어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 대상자 특성(노쇠도, 건강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 미흡	•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중복 해소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노쇠도·건강위험군별 정밀 맞춤형 건강 관리 강화 • ICT 기반 비대면 + 대면 결합으로 상시 건강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사업예산)** 1,752,146천원(균특 50%, 시비 25%, 구비 25%)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균특	시비	구비	비고
계	**1,752,146**	**876,073**	**438,037**	**438,036**	
방문건강관리	1,201,042	600,521	300,261	300,26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551,104	275,552	137,776	137,776	(확대) 3개구→5개구

□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명	역할
주관부서	질병관리과	• 자치구 예산 배분 및 성과 관리 • 사업 기술지원 및 검토
수행기관	5개구 보건소	•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 사업 수행, 서비스 운영 • 사업 실적 및 운영관리
협력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오늘건강 앱 개발 및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리 • 사업 보안지침 관리 및 기술지원

□ 추진일정

○ (1월 ~ 2월) ICT시스템 및 오늘건강 앱 세팅

○ (수시) 군별 맞춤 건강관리계획 수립 및 서비스 추진

○ (분기별) 노인 대상 노쇠(허약)평가 수행률 중간 점검

□ 홍보계획

○ 블로그, SNS 운영을 통한 방문건강관리정보 제공

○ 유관기관(복지관, 시설 등) 연계한 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5-5 자전거도로 정비표준 마련

주관부서	보행자전거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기반시설팀	연락처	042-270-6336

□ 추진배경

○ **(현 행)** 국토부 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시행

- 도로 환경에 맞추어 표준안(지침) 필요

○ **(개선안)** 도로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 표준 작성·시행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자전거도로 정비표준 마련

○ **(사업기간)** '25. 6. ~

○ **(사업내용)** 지역 도로 여건을 반영한 대전형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기준 마련으로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 **(추진경과)** 정책연구 추진,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전국 광역시 최초**로 자전거도로 정비표준 마련·배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로 환경을 반영한 대전형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시행 지침수립
- 자전거도로 개선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중앙부처 표준지침 세부화 필요	•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한 세부지침 수립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대전형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지침 수립

[표준안]

ㅇ **도로 신설**

┌ 폭 20m 이상 → 전용도로/전용차로
└ 폭 20m 이하 → 분리형 겸용도로



ㅇ **도로 정비**

┌ 보도폭 2.7m 이상 → 분리형 겸용도로
├ 보도폭 2.0m 이상 2.7m 이하 → (확폭 불가 시) 비분리형 겸용
└ 보도폭 2.0m 이하 → (원칙) 보도 환원

ㅇ **포장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 기본 = 아스콘 포장(고유색)
- 이면도로 교차점 = 고원식
- 폭원 부족 → 가로수 이식
- 터널, 지하차도 → 비분리형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대전연구원) 자전거도로 정비표준(안) 연구 수행

○ (시) 관련부서(기관) 업무 협의, 정비 표준 작성·배포

□ 추진일정

○ '25. 6.~11.: 정책연구 추진 / 대전연구원

○ '25.11.: 대전형 자전거도로 정비표준(안) 마련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6. 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표준 배포 / 시, 자치구 등

○ '26. 2.~: 도로 신설·정비 및 개발사업 시 표준 적용

○ '26.12.~: 운영상황 점검 및 정비 표준 지속 보완 추진

□ 홍보계획

○ 관련부서(기관) 안내를 통한 정비 표준 전파

○ 정비 표준 마련 보도자료 배포

5-6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주관부서	철도정책과	협조기관/부서	대전교통공사
담당팀명	도시철도계획팀	연락처	042-270-0931

□ 추진배경

○ 기존 도시철도 연계 교통수단 구축 및 신규 개발지구(갑천지구 등)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도입 필요
* 신도시 대중교통부족 사례: 동탄신도시, 김포 한강도시, 미사신도시 등

○ 대규모 수송력을 갖춘 공공교통 수단(3칸 굴절차량)을 적기에 공급하여 신도시 교통난 해소 및 편리한 정주 여건 조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업방법)**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사업 / 전국 최초 시행

○ **(구 간)** 건양대병원~도안중로~도안동로~유성온천역 / 6.5km

○ **(정 류 장)** 16개소

- (신규) 3개소(유성온천역, 용소삼거리, 건양대병원), (개량) 13개소

○ **(차 량)** 3칸 굴절차량, 3대(수송인원 230명)

○ **(사 업 비)** 185억 원

○ **(운 행)** 06:40 ~ 21:20

- 첨두(07:00~09:00, 17:00~20:00) 15분 간격 / 비첨두 25분 간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기반시설 구축)** 신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추진
- **(교통서비스 개선)** 현재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도안지구 일대에 시범노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증진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신도시 대중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불편 • 도시철도(트램·지하철 등) 건설은 고비용, 장기간의 공사 기간 필요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 도로통제로 출퇴근 시간 혼잡 심화로 시민 불편 가중	• 대용량 대중교통수단 적기 공급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짧은 사업 기간, 경제성 확보로 정부 및 지자체 재정 부담 감소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간 중 계백로, 도안대로 등 대전 남부권 교통혼잡 완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8,585백만원(시비 100%)

- 시설비 5,500백만원, 공기관위탁사업비 3,085백만원

□ 추진체계

○ **(사업추진)** 대전광역시

○ **(제도개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전광역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체계건설사업"이란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다.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체계건설사업"이란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개량 및 전용차량 도입 나.~다.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길이·너비 등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시범노선 건설사업 추진(~'26. 10.),

○ 개통 및 시범노선 운영('26. 10. 목표)

□ 홍보계획

○ 시험운행('26. 4.~) 및 개통('26. 10.) 언론 및 SNS 홍보 추진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6-1 웹툰 IP 기반 시민참여형 콘텐츠 생태계 혁신 구축

주관부서	문화콘텐츠과	협조기관/부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팀명	문화콘텐츠산업팀	연락처	042-270-3881

□ 추진배경

○ 웹툰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미흡, 인재 유출 지속

○ 창작 중심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참여형 정책 전환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26. 1월 ~ 12월

○ **(사업목적)** 웹툰 클러스터 전략사업 운영 및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

○ **(추진방식)** 민·관·학 협력 기반 전주기 지원체계 운영

○ **(차 별 화)** 시민참여와 AI 기술을 결합한 웹툰 산업 모델 구축

○ **(협력체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기업 등과 협력 기반 구축

○ **(사업내용)** 웹툰 IP 기반 시민참여, 인재양성, 산업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정책 운영	- 시민 대상 웹툰 아이디어 공모(시민 참여 콘텐츠 발굴) - 시민 체험형 웹툰 행사(전시, 체험부스 등) 운영
산업 전주기 지원	- (창 작) 웹툰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학생 10명 지원) - (교 육) 산학공동캠퍼스 운영(5개 대학 연계) - (사업화) 웹툰 기업 상담회 및 IP 확장 지원
과학기술 융합	- 웹툰 AI·R&BD 기반 창작 및 사업화 지원 - 웹툰 과학기술 포럼 개최로 산·학·연 협력 및 최신 기술 공유
정책소통 강화	- 웹툰진흥위원회 운영(전문가·기업·대학 참여) 및 자문체계 구축 - 정기 간담회 및 현장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대외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기업 등과 협력 기반 구축 - 대학만화웹툰대전('26.11.) 공동주관으로 전국행사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민 참여형 콘텐츠 공모 및 행사 참여자 **1,000명 이상**
- 웹툰 창작 및 사업화 지원 과제 **15건 이상**
- 웹툰 기업 상담 및 매칭 **100건 이상**
- 웹툰 인재 양성(학생·작가) **50명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행정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창작 중심 지원 • 지역 인재 외부 유출 • 시민 체감도 낮음	• 시민 참여형 정책 전환 • 창작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 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 • 시민이 체감하는 콘텐츠 확대

□ '26년 소요예산 / 총 230백만원

○ 웹툰 멤버십 프로그램 : 30백만원

○ 산학공동캠퍼스 지원 : 50백만원

○ 대학만화웹툰최강전 및 포럼 : 82.7백만원 (문체부 공동주관 200백만원 별도)

○ 운영비 및 인건비 등 : 67.3백만원

□ 추진체계

구 분	기 관	역 할
총 괄	대전광역시	사업 기획 및 정책 추진
운 영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협 력	지역대학·기업	인재양성 및 산업연계
자 문	웹툰진흥위원회	정책 및 사업 자문

□ 추진일정

○ ’26. 1~4월: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중앙투자심사 대응, 사업 기획

○ ’26. 5월: 웹툰 멤버십 프로그램 모집공고

○ ’26. 6월: 산학공동캠퍼스 협약 및 사업 착수

○ ’26. 7~10월: 창작지원, 교육, 기업 연계 추진

○ ’26. 11월: 웹툰 과학기술 포럼 및 최강전 개최

○ ’26. 12월: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홍보계획

○ **(온라인 홍보)** 시 홈페이지, SNS, 유튜브 활용, 웹툰 플랫폼 및 커뮤니티 연계 홍보

○ **(오프라인 홍보)** 대학, 기업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행사 연계 현장 홍보

○ **(언론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지역 언론 협력, 성과 중심 스토리텔링 홍보 추진

6-2 대전광역시 자율주행버스(A5) 실증 운영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기관/부서	ETRI
담당팀명	교통정책팀	연락처	042-270-5712

□ 추진배경

○ 자율주행은 미래모빌리티 핵심 산업으로 상용화 단계 진입

○ 대전시는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유상운송 전환 추진 중(’26. 5. 4.~)

○ 시민 체감도 제고 및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업생태계 연계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자율주행버스 유상운송 전환 및 서비스 정착

○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및 참여 확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상시 실시(탑승객이 버스에서 바로 참여)
- 홍보 및 정책소통을 통한 시민 수용성 제고
- 운행 횟수 및 정류장 확대(편도 2회→4회, 정류장 6개→15개)

○ 자율주행 데이터 개방 및 산업생태계 연계

- 자율주행버스 수집 정보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기반 구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유상운송 전환 및 서비스 정착

- 유상운송 전환(’26.5월) 이후 정상운행률 95% 이상 유지
- 일평균 이용객 수, 무상운행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

○ 시민 체감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시민 체험 및 의견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연 1회 이상)

○ 자율주행 데이터 개방 및 산업 연계

- 자율주행 운행데이터 1종 이상 개방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무상 시범운행 중심의 초기 실증 단계로, 교통서비스 기능과 산업 연계가 제한적	• 유상운송 전환을 통해 안정적 교통서비스 정착 및 실증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 일부 구간 중심의 제한적 운행으로 시민 이용 및 체감도가 낮은 수준	• 운영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 이용 확대 및 체감도 향상
•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 내부 운영 중심으로 활용	• 자율주행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기술 개발·서비스 창출 기반 구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전시 자치법규 미제정

□ '26년 소요예산

○ 총 사업비(2024~2026) : 3,900,000천원 / 국 2,340,000 시 1,560,000

○ 2026년 소요예산 : 1,000,000천원 / 국 600,000 시 400,000

□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총괄) :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정책 결정

○ 대전광역시(총괄) : 市 자율주행버스 실증 사업 기획 및 운영, 정책 조정

○ 연구기관(ETRI) :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수행기관(㈜무브투) : 자율주행버스 운행 및 실증

○ 수행기관(㈜쿠바) : 자율주행버스 실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추진일정

○ ('26. 5. 4.) 유상운송 전환

○ ('26. 5월~)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 홍보계획

○ 홍보방법

- 언론보도, SNS, 시 홈페이지, 교통정보 플랫폼, 자율주행버스 내부 광고 등

○ 홍보내용

- 자율주행버스 이용 방법 및 안전사항 안내
-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및 참여 안내
- 미래모빌리티 도시 이미지 홍보

6-3 바이오헬스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주관부서	반도체바이오산업과	협조기관	교육청,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담당팀명	바이오산업기반팀	연락처	042-270-0371

□ 추진배경

○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컨소시엄) 등이 협약하여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 운영

○ 지역 바이오기업 확장 및 공장 신설 등 숙련된 현장 바이오 인력 수요 증가 대응 및 안정적 지역 정주 우수인력 양성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 2030.
- (사 업 비) 75억 원(국 45, 시 15, 교육청 15)
- (사업주체) 지역 컨소시엄 구성

분 야	고등학교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	대학
바이오헬스	대전생활과학고	교육청	대전시	㈜알테오젠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

-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직무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의 바이오 직무 이해도 및 진로 인식 수준 제고, 산업현장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 함양
- **(교직원 기업현장 직무연수)** 바이오헬스분야 산업 이해도 및 지도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 과목 교수 직무 연수
- **(기업 전문가 특강)** 현직 전문가의 현장경험 공유를 통한 진로탐색 역량 강화
- **(취업 지원)**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표현, 의사소통 역량 강화, 채용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18명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수 : 8개사
- 직무연수 참여 교직원 : 10명
- 현장 근무 전문가(바이오기업 CEO 등) 특강 : 2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인력공급과 기업수요의 미스매치 • 교육과 현장의 괴리 발생	•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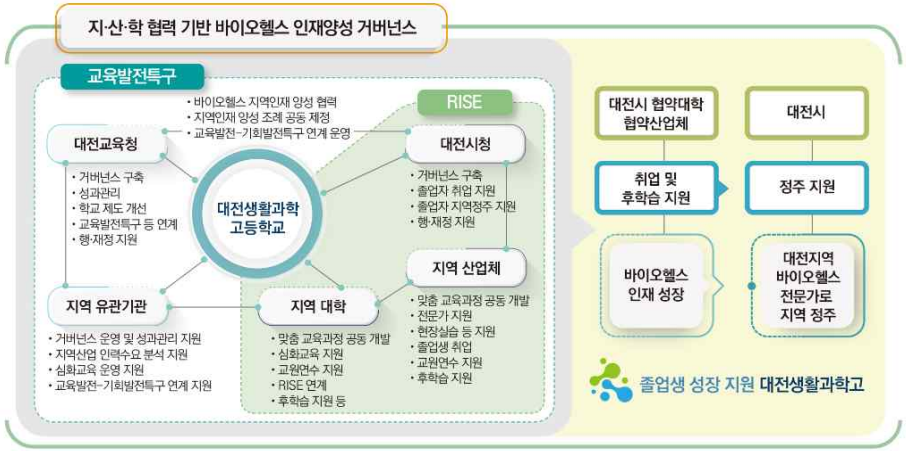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인턴십 프로그램 45백만원, 교직원 연수 42백만원, 특강 및 정주 지원 등 63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 (TP)	▷	참여 기업 모집 및 기업 의견 수렴 (TP)	▷	참여 학생 모집 (학교)	▷	프로그램 수행 (참여 기업-학생)	▷	사업 피드백 (학교-TP)
`26. 1. ~ 3.		`26. 4. ~ 6.		`26. 6.		`26. 7. ~ 8. / `26. 12. ~ 27. 1.		사업 종료 후

○ 교직원 직무연수 참여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 (TP)	▷	직무연수과정 신청 (학교)	▷	교육비 지급 (교육기관)	▷	직무교육 (학교-교육기관)	▷	교육 결과보고 (TP-학교)
`26. 1. ~ 3.		수요 발생시		교육 시작 전		수시		사업 종료 후

□ 홍보계획

○ 주요 행사 보도자료 배포 등

6-4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설립) 및 운영

주관부서	식의약안전과	협조기관/부서	(시) 도시재생과, (서구) 도시정비과
담당팀명	위생정책팀	연락처	042-270-4871

□ 추진배경

○ (환경 변화)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 경쟁력 있는 뷰티산업 정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제기

○ (지역 여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뷰티 관련 학과 및 교육체계 구축, 뷰티관련 사업체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뷰티학과 교육기관: 11개 대학 등(15개 학과), 특성화 고등학교(6개교)

○ (시정방향)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뷰티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 수행 및 뷰티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 추진개요

○ 개원일자: 2026. 1. 1. / **전국 최초 뷰티 전담기관 설립**

- (위치)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 1층

* (규모) 전용면적 168.75㎡(약 51평) / (인력) 5명 / 원장(비상임), 사무국장, 팀원 3

- (신사옥 건립) 대전 서구 도마동 105-77번지 * 공사 완료 후 이전('27. 하반기 예정)

* (규모) 연면적 2,232.91㎡(약 675평) / 지하 1~지상 3층, 주차장 39면
* (공간) 뷰티 교육실(4), 코워킹스페이스(공유공간), 전시·체험실, 사무실, 대강당 등

○ 추진방향

- 지역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뷰티산업 기반의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위탁기간: 3년('26. 1. ~ '28. 12.)

○ 주요사업: 전문인력 교육·양성, 취·창업 지원, 뷰티 행사 개최 등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 컨트롤타워,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초기) 아미용 서비스산업 육성 → (중장기) 글로벌 뷰티산업 성장 플랫폼 사업 단계적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뷰티 관련 전문가 소통 협력 간담회 개최: 2026. 1. 9.(금)

- 참 석 자: 22명 / 이·미용 뷰티 전문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장 등
  * 이·미용 단체장 9, 미용장 2, 대학 교수 7, 학원 3
- 주요내용: 뷰티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 뷰티산업 육성 전략 논의 등

○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출범(개원식): 2026. 1. 16.(금)

- 참 석 자: 뷰티 단체장 및 학계, 소상공인 등 관계자 100여 명
- 주요내용
  · 뷰티산업진흥원 거점 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원 및 육성 방향 공유
  · 민·관·산·학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시너지 방안 모색
  · 뷰티산업 전문가 의견 교환 및 시민의견 현장 청취 등

○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 추진: 2026. 2. 23.(월) 14:00

- 참 석 자: 뷰티산업 종사자 및 단체장, 학계, 유관기관 등 150여명
- 주요내용
  · 뷰티산업진흥원 정책방향 공유 및 참여 방안 설명
  · K-뷰티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 현장 네트워킹 및 의견 수렴 등

○ 지역 내 뷰티산업 인재 발굴 뷰티산업진흥원 홍보대사 위촉

- 추진목적: 대전 뷰티 아티스트를 발굴, 홍보대사로 선발·양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통해 뷰티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
- 대　　상: 3명 / 대전 지역 뷰티 인플루언서, 아티스트, 소상공인
- 내　　용: 진흥원 사업 참여·홍보, 뷰티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 수행

○ 뷰티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대전 지역 현직 뷰티 소상공인, 종사자 10명 내외
- 내　용: 뷰티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트렌드 분석·반영 → 기술 교육 → 수익 창출 등 교육과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설립) 운영 / 사업설명회 개최
- 홍보대사 위촉: 3명 /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 뷰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추진 : 2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이·미용 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기구(공공기관) 부재	• 뷰티산업 체계적인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제5조의2(대전뷰티산업진흥원)

□ '26년 소요예산

○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운영 민간위탁금: 459,692천원(시비 100%)

○ 신사옥 건립비*: 14,452,000천원(국비 2,850,000, 시비 11,332,000, 구비 270,000)
  * 대전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추진

□ 추진체계

○ (대전시) 식의약안전과(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도시재생과(예산 교부)

○ (대전 서구)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신사옥 건축 *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2026. 1 ~ 2월)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설립), 사업설명회 개최

○ (2026. 2 ~ 12월) 홍보대사 선발(위촉),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 수행

○ (2026. 5 ~ 12월) 뷰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추진

□ 홍보계획

○ 언론보도 및 대전시 밴드, 유튜브 홍보 / 뷰티산업진흥원 설립(개원)

○ 뷰티산업진흥원 사업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 뷰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구축('26.) 홍보

6-5 청년참여형 식품안전 정책·관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지역대학/ 관련분야 학과 대학정책과
담당팀명	식품분석과	연락처	042-270-6782

□ 추진배경

○ 식품·의약품 등 관련분야 전공 청년을 중심으로 정책 참여와 진로 연계를 결합한 실무 경험 수요 증가

☞ **식품안전 정책 소통 및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지역의 협력모델 도입 필요**

○ 기존 식품안전분야 체험 프로그램은 단발성 운영으로 정책 체감도 및 확산 효과 미흡 ∴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지역대학 운영 '미래 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에 참여

***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노동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식의약연구부-533(26. 2. 13)호**

○ 식품안전 및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내용) 청년 일경험 및 일자리 관련 직무 체험 기반 프로그램 운영

(추진목적)

- 식품 및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해 체험형 참여 기반의 소통 강화 채널 확보
- 청년 대상 실무 중심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의 진로 연계 강화 및 식품안전 정책 확산

(추진기간) '26년 4월 ~ 11월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연구원 역할 및 검사정책 홍보
- 식품 등 방사능 분석 이론 및 실습
-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및 실태 소개
- 식품·의약품 분야 분석 장비 및 연구 업무 체험
- 식품·의약품 분야 취업, 진로 컨설팅 및 관련 질의·응답

○ 관학연 협력 및 참여 플랫폼 구축

- '미래 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기관 간 상호방문 및 협업 강화
- 청년 일경험 및 일자리 연계 직무 체험 기반 실무역량 강화
- 인턴·취업 연계 가능 구조 마련 및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정량지표
  - * 참여 대학생 수 30명 이상 / 일경험 연계 대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이상
  - * 참여 만족도: 90% 이상 / 협력 기관수: 2개 이상
- 정성지표
  - * 인턴형 직원 채용 도입 등 청년 진로 설정 및 취업 연계 효과
  - * 청년 대상 식품안전 정책 신뢰도 및 이해도 향상
  - * 관학연 협력 기반 지속성 확보

○ 기대효과

구 분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연구원	• 단순 정보 전달중심 식품 정책 홍보 • 기간제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인력 수요 파악의 체계성 부족	• 전문성 기반 참여형 정책 홍보로 신뢰도 제고 • 청년 참여를 통한 전문 인재 Pool 확보 • 참여자 데이터 기반 수요 맞춤형 인력 운영
참여자	• 이론 중심 교육으로 실무 경험 부족 • 단편적 진로 탐색 및 구직 활동 • 직무 이해도 부족	• 이론-실습 연계 실질적 직무 경험 확보 • 체험 기반 진로 설정 및 취업 역량 강화 • 현장 이해도 향상 및 실무 적응력 제고

"체험 중심 구조에서 → 인재 양성·채용 연계형 협력 생태계로 전환"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주관)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지역대학	(참여) 관련분야 대학생
·방사능 분석 장비 운영 체험 ·식품 안전성 분석 장비·실험실 견학 ·청년 참여를 통한 정책 홍보	·관학연 네트워크 강화 ·청년 숙련 인력 양성 지원 ·맞춤형 일자리 체험 지원	·취업·진로 등 체험 ·일 경험을 통한 진로 방향 모색 ·다양한 실무 역량강화

*** (대학정책과) 지역의 대학 및 청년정책 안내 및 활동 지원**
: 향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2월) 관련 지역대학 관계자-보건환경연구원 실무 협의
- (2월)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 에 참여기관으로 신청
- (4월) 청년 직무체험 관련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내부결재
- (5~6월) 지역 대학 관계자 등 상호방문을 통한 일정 조율
- (7~8월)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 관련 인턴형 직원채용

  *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8~10월) 식품 등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실시
- (11월)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 홍보계획

○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 보도자료, 시 및 연구원 SNS와 홈페이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용
- 지속가능한 소통 채널 구축으로 지역의 대학 및 청년 정책 알림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7-1 트램 정거장 공공목적용 지주 이용 간판 허용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광고물관리팀	연락처	042-270-6451

□ 추진배경

○ 일반적인 지주 이용 간판 설치 규정 외에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 가능한 지주 이용 간판 위치에 지하철역 포함(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 현행 규정상 현재 건설 중인 트램역은 지하철역이 아닌 관계로 특례 규정에 따른 공공목적용 지주 이용 간판 설치 불가

□ 세부 추진사항

○ 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트램역에도 지주 이용 간판 설치 허용

- 허용 대상을 지하철역에서 **도시철도역**으로 확대

> **< 도시철도법 제2항제2호 >**
>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기대효과

○ 트램역 공공목적용 지주 이용 간판 설치를 허용하여 필요시 행정 홍보 등 활용 가능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시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제6조제3항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 ---------- ---------- ---------- ---------- ----------. 1. ---------- ---------- ---------- --. 가. ------ 도시철도역------- ---------- --------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조례 개정)

○ 사전 법제심사 및 개정계획 수립(5월) → 1차 법제심사·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자치영향평가 요청 및 입법예고(5월) → 2차 법제심사(6월) → 조례규칙심의회(7. 23.) → 시의회 심의·의결(9월) → 시행(10월)

□ 홍보계획

○ 개정 시 옥외광고물 조례 공포 후 자치구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홍보담당관 협조) 및 시 운영 SNS 게시

7-2 횡단보도 그늘막 옥외광고 허용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광고물관리팀	연락처	042-270-6451

□ 추진배경

○ 하절기 혹서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그늘막을 설치·운영하여 주민 편의 도모

○ 설치 그늘막의 고장 수리 등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소요

□ 세부 추진사항

○ 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횡단보도 그늘막에 옥외광고 표시 허용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횡단보도 그늘막 추가

□ 기대효과

○ 그늘막 옥외광고 허용으로 자치구 그늘막 운영 예산 지원 효과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시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횡단보도 그늘막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조례 개정)

○ 사전 법제심사 및 개정계획 수립(5월) → 1차 법제심사·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자치영향평가 요청 및 입법예고(5월) → 2차 법제심사(6월) → 조례규칙심의회(7. 23.) → 시의회 심의·의결(9월) → 시행(10월)

□ 홍보계획

○ 개정 시 옥외광고물 조례 공포 후 자치구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홍보담당관 협조) 및 시 운영 SNS 게시

7-3 공사정보 '민간 플랫폼(T-map 등) 선제 제공 체계' 구축

주관부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건설1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건설1팀	연락처	042-270-8771

□ 추진배경

○ 공사 교통통제 정보가 민간 플랫폼(T-map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현재 플랫폼 요청 시에 자료를 제공하는 수동적 대응 구조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요청 기반 사후 대응으로 공사 정보(변경사항 포함) 반영 지연 발생

○ 제공자료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전달 효율 저하

□ 세부 추진사항

○ 공사 일정 확정 시 교통통제 정보 민간 플랫폼에 '선제 제공'

○ 주요 공정 사전 통보 기준 마련과 플랫폼 제공용 '표준 양식' 운영

- 통제구간, 기간, 우회도로, 위치도 등 필수항목 통일

○ 민간 플랫폼과 협업 체계 구축과 변경사항 실시간 갱신

- 창구 일원화 및 이력 관리, 일정 변경 시 즉시 제공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공사 교통통제 정보 민간 플랫폼 사전 제공률 100% 및 반영 소요시간 단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요청 시 수동 대응 • 정보 반영 지연 • 자료 형식 불일치	• 선제 제공으로 신속 반영 • 표준화된 자료로 전달 효율 향상 • 실시간 갱신으로 정보 신뢰성 확보 • 공공-민간 협업 기반 행정 구현

7-4 찾아가는 대기질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자치구
담당팀명	미세먼지분석과	연락처	042-270-6742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우려와 환경사고로 인해 생활권 주변 대기질에 대한 국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요구 증대

○ 고정식 대기측정소는 오염원과 필요지역에 따른 유연한 대응에 한계

* 대전 대기환경측정소 현황('26년): 15개소 / 동구 2, 중구 2, 대덕구 3, 서구 3, 유성구 5

○ **대기질 정보 사각지대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기오염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등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 세부 추진사항

○ **(측정지점 선정)** 주민 요청 전 선제적인 지점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 **대기오염 우려지역, 민원발생지역, 측정소 미설치지역 우선 발굴**
- 주민 의견 반영 시·구청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측정지점, 일정 확정

○ **(이동차량 운영)** 이동측정차량 활용 24시간 연속 1시간 평균농도 측정

- **대기측정소와 동일한 장비**를 탑재한 이동차량 설치·점검·측정
- 측정항목: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 7항목, 기상 5항목

○ **(측정결과 제공)** 측정결과 신속 제공 및 소통 강화

-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 특이사항 점검, 도시 평균값 비교 평가
- 측정결과 유관부서 신속 공유, 누리집 공개
-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추가 측정 추진, 맞춤형 정보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이동측정시스템 운영일수(횟수): **연간 150일 이상**(13회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고정식 대기측정소 중심 운영 • 불가피한 대기질 정보 사각지대 발생 • 측정소 자료와 내 주변의 체감도 저하 • 사후 대응 중심의 수동적 행정 운영	• 대기질 정보 사각지대 해소 • 내 집 주변, 오염원 중심의 시민체감 정보 제공 • 주민 요청 전 찾아가는 능동적 환경행정 구현 • 고농도 오염대응 및 배출원 관리 등 정책활용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27,580천원(시비)

- 측정장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등

□ 추진체계

○ **(시·구)** 측정지점 신청, 차량 설치 협조, 측정결과 공유 및 대응

○ **(연구원)** 이동차량 운영, 대기질 측정, 데이터 분석·평가, 결과 제공

○ **(설치기관)** 주차공간 및 전원 제공

□ 추진일정

○ 시·구청으로부터 측정지점 접수('26. 1월)

○ 현지 조사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26. 1월)

○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및 결과 제공('26. 2월 ~ 12월)

* 2026년 이동측정시스템 세부 추진일정 (현장상황 및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연번	측정기간	측정지점	측정목적	비고
1	02. 11. ~ 02. 23.	환경에너지사업소	산업단지 인근지역	
2	02. 25. ~ 03. 09.	환경자원사업소	대기오염 민원발생지역	
3	03. 11. ~ 03. 22.	지수체육공원	산업단지 인근지역	
4	03. 24. ~ 04. 05.	을미기공원	산업단지 인근지역	
5	04. 07. ~ 04. 16.	신탄진1통경로당	대기오염 민원발생지역	
6	04. 18. ~ 04. 29.	KT&G	대기오염 민원발생지역	
7	05. 01. ~ 05. 12.	하수처리장	대기오염 민원발생지역	
8	09. 19. ~ 09. 30.	대전컨벤션센터	대기오염 민원발생지역	
9	10. 02. ~ 10. 13.	대전오월드	대기측정소 미설치지역	
10	10. 15. ~ 10. 25.	상소동오토캠핑장	대기측정소 미설치지역	
11	10. 27. ~ 11. 05.	용운국제수영장	대기측정소 미설치지역	
12	11. 07. ~ 11. 18.	대청호자연생태관	대기측정소 미설치지역	
13	11. 20. ~ 12. 03.	바우배기어린이공원	산업단지 인근지역	

□ 홍보계획

○ (매체) TV, 신문, SNS(시 누리집·밴드, 연구원 누리집·인스타) 등

○ (내용)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홍보, 대기질 측정결과 공개

7-5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센터 운영 확대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협조기관/부서	농생명정책과
담당팀명	동물방역과	연락처	042-270-6895

□ 추진배경

○ **(환경변화)** 반려동물 사육가구 증가와 사람·동물간 접촉 확대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위험 및 치료비 부담 증가

- 동물유래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체 사람 감염병의 60%이상 차지

  * 코로나19, 사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등

- 우리 시 반려동물 사육마릿수* 매년 1만마리씩 지속 증가

  * 사육마릿수: 82,397('21) → 92,055('22) → 100,416('23) → 115,694('24) → 124,172('25)

○ **(정책필요)** 반려동물-환경-사람을 연계한 One Health 기반 통합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 운영 확대

- 반려동물건강한마당 축제 등 시민 참여형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이동검진센터 운영
- 검사횟수: 연 1회 → 연 2회(상·하반기)
- 검사항목: 5종* → 7종(광견병, 브루셀라 추가)

  *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에를리키아증, 심장사상충증, 지알디아증

○ 반려동물 환경기반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강화

- 반려동물 혈액검사, 산책로 및 보호시설 진드기 채집 검사 병행
- 검사항목: SFTS,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에를리키아증, 큐열
- 검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사전예방 중심 방역에 활용
- 검사결과 데이터 축적·분석을 통해 지역 내 질병 발생 위험도 평가

○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지속 추진

- 민간 동물병원과 협업하여 임상시료 기반 내성균 조사
- 항생제 감수성 분석을 통한 내성 확산 사전 차단

○ 민·관 협력 기반 도시형 동물 방역체계 구축

- 대전수의사회 및 민간 동물병원과 협업체계 운영
- 이동검진센터 운영, 시료채취 및 검사 협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 운영 확대: 연 2회, 800건 이상 검사
-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검사 확대: 7종, 800건 이상 검사
- 민·관 협력체계 강화: 협력 동물병원 참여 확대 및 공동사업 지속 운영
- 검사결과 기반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요인 분석보고서 공유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반려동물 중심 단편적 검사 수행 • 인수공통전염병 사전 대응체계 미흡 • 이동검진센터 운영 제한적 • 민·관 협력 활용도 제한적	• 반려동물·환경 연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 방역 강화 • 연2회 확대운영으로 시민 체감 서비스 향상 • 동물병원 등과 협업강화로 방역 대응력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확대 및 이동검진센터 운영 관련 계획 정비

- 기존 시험·검사 체계를 활용한 반려동물 검사 절차 명확화
- 이동검진센터 운영 및 검사 항목 확대 반영

□ '26년 소요예산

○ 시험연구비(가축전염병근절) 37,022천원 및 사무관리비(가축방역사업, 가축전염병근절) 5,500천원

□ 추진체계

○ **(총괄)**대전보건환경연구원

-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및 이동검진센터 운영 총괄
- 반려동물 및 환경 시료 검사 수행

○ **(협업)**대전수의사회 및 민간 동물병원

- 반려동물 시료 채취 및 검사 협력
- 이동검진센터 운영 시 시료채취 협조

○ **(자문)**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수공통전염병 검사기법 및 정책 자문

□ 추진일정

○ '26. 3월: 사업 세부 계획 수립

○ '26. 4월: 대전수의사회 및 민간 동물병원 방문 및 의견 청취

○ '26. 5~10월: 반려동물 및 환경시료 검사, 이동검진센터 운영

○ '26. 11월: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결과 분석 및 성과 공유

□ 홍보계획

○ 검사 결과 기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정보제공

○ 민간 동물병원 연계를 통한 참여 안내 확대

○ 연구원 홈페이지 및 시 SNS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강화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8-1 고지서 발송 업무감축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송달 확대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협조기관/부서	5개 자치구 세무부서
담당팀명	세정팀	연락처	042-270-4242

□ 추진배경

○ 현재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액(500원/1,000원)이 적어 납세자의 전자송달 전환 유인이 부족

○ 정기분 고지서(1,6,7,8,9,12월)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업무는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

○ 세액공제 상한액을 법 상한액(800원/1,600원)으로 상향하여 전자송달 신청유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 있음

□ 세부 추진사항

○ **(조례 감면 금액 상향 추진)**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액을 법 상한액(800원 / 1,600원)으로 상향

○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전자송달 전환을 유도하여 종이 고지서 인쇄, 발송, 반송 처리 등 번거로운 행정업무를 감축하고, 절감된 행정력을 대민 서비스에 집중

○ **(시민 소통 방안)**

-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적극 안내하여 시민의 참여 유도
- 세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함을 홍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전자송달 신청 건수 기존 대비 3% ~ 9% 이상 상향 달성 목표
- 우편 발송 주체인 자치구의 종이 고지서 발송비용절감

※ (일반우편 건당 492원, 등기우편 건당 2,892원) (제작비 및 우편요금) 절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세액공제액 500원 / 1,000원 • 종이 고지서 중심의 업무 처리로 우편 발송비용 등 행정비용 부담	• 세액공제액 800원 / 1,600원으로 확대 • 종이 고지서 발송 업무 감축으로 행정 효율성 극대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개정법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

- **(세부내용)**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1개 신청 시 세액공제액을 500원 → 800원, 둘 다 신청 시 1,000원 → 1,600원으로 상향

○ '26년 하반기 조례 개정 시 자치구와 공동 개정 추진

□ '26년 소요예산

○ 세액공제액 상향에 따른 추가 감면액 추계

- **(합계)** 약 175 백만원 (비예산 사업 성격의 세입감소분).
- **(분담비율)** 시 32%(약 55 백만원), 자치구 68%(약 120백만원)
- **(실질 부담액)** 자치구의 경우 전자송달 증가(3~9%)에 따른 비용 절감(약 8백만원 ~ 2,4백만원) 효과가 발생하여 일부 상쇄

□ 추진체계

○ **(시 세정담당관)**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및 및 5개 자치구 구세 조례 개정 협의 총괄

○ **(자치구 세무부서)** 구세 감면 조례 개정 및 자치구별 재정 부담액 및 우편비용 절감 효과 분석, 조례 공동 개정 이행

□ 추진일정

○ **('26. 상반기)** 자치구 협의 및 비용절감 효과 분석 등 계획 수립

○ **('26. 하반기)**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의회 상정

- 세액공제 확대 추진사항 홍보를 통해 참여자 확대 유도

○ **('27. 1월~)** 개정 조례 시행 및 혜택 적용

□ 홍보계획

○ 시·구 홈페이지, 모바일 알림톡, 정기분 고지서 동봉 안내문 등을 통해 '납세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널리 홍보.

○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원스톱 신청 방법을 직관적으로 안내하여 신청률 제고.

8-2 예산성과금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세입 창출 및 효율적인 세출 절감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협조기관/부서	정책기획관
담당팀명	예산총괄팀	연락처	042-270-3093

□ 추진배경

○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예산절감 분위기 확산

□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

  * 소속 공무원 지방공기업이나 타 법령에 따라 지자체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최소단위 조직(팀)
  * 예산낭비신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 심사기준

-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

격려금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 정도 및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경우**, 1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지출 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조직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동기부여

○ 예산낭비신고, 제도개선 제언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제안 창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예산낭비 경각심 부재 • 세입 증대 및 지출절약에 대한 동기부여 부재	• 적극적 시민 감시를 통한 예산낭비 경각심 제고 • 적절한 보상체계 도입에 따른 세입 증대 및 지출절약 동기부여 제공

□ 관련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규칙

□ '26년 소요예산

○ 예산성과금 등 2,100만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

□ 추진일정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자체위원회 심 사 (사전심사)	⇨	예산성과금 위원회심사 (지급대상 확정)	⇨	예산성과금 지 급 (개인, 조직)
3월		3월 중		4월 중		5월말까지

8-3 당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당직제도 개편 추진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협조기관/부서	행정안전부
담당팀명	총무팀	연락처	042-270-0589

□ 추진배경

○ 현행 당직운영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중복 및 인력 활용 비효율 발생
- 행정환경 변화* 및 120콜센터 운영으로 당직자 역할 및 필요성 감소

* 전자문서시스템·출입보안시스템 확충, 중앙제어실 당직근무 실시 등

□ 세부 추진사항

○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 일반직원의 당직 편성 폐지,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증원을 통한 당직·상황근무 전담인력 운용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경험과 역량을 갖춘 근무인력 증원 및 상황반장(당직사령) 업무 수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업무 및 인력 중복을 통합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재난상황 관리 대응업무의 일원화로 비상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책임성 강화 및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확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피로도 및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 당직수당 및 당직실 관리비 예산 소요 (연간 약 119백만원) • 재난상황 대응체계가 당직실·재난안전상황실로 이원화 되어 비효율 발생	• 주기적 당직근무 부담감 해소로 사기 진작 및 업무공백을 방지하여 행정의 연속성 확보 •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연간 약68백만원) • 재난상황 관리 대응업무의 일원화로 재난안전대응의 신속성·전문성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업무 수행 근거 조항 마련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 조항 신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상황실에서의 당직업무 수행) / 신설

① 제6조제7항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2026. 9월 시행 예정

8-4 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

주관부서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혁신평가팀	연락처	042-270-3042, 3043

□ 추진배경

○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협업 연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발굴·개선안을 도출하여 행정 변화 대응 및 혁신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 세부 추진사항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운영기간) 상·하반기 각각 1회 운영
- (주요내용)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 공유, 심사 및 포상
- (선정계획) 총 7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 (포상내역) 상장(훈격:시장) 및 포상금 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특별휴가,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실적가점,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등 우수공무원 선발자 희망사항 및 기관 상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
- (소요예산) 3,000천원(포상금)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운영기간) 2026. 5. ~ 12.
- (적립대상) 6급 이하 공무원
- (적립방법) 적립 기준에 따른 개인별 신청 또는 전담부서 일괄 적립*
  * 적극행정 집합교육 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
- (인출방법)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 차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소요예산) 1,000천원(포상금)

○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및 성과공유회 추진**

- (규모·기간) 10개 동아리 내외 / 매년 4월 ~ 10월(7개월)
  * '26년 9개 동아리 선정(2월), '25년 9개 동아리, '24년 10개 동아리
- (내용·지원) 활동비 지원을 통한 동아리별 자율 연구 활동 추진
- (성과공유회) 우수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결선 심사

【공무원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 (일정) 매년 11월 말 ~ 12월 중
· (대상) 1차 심사(최종 연구보고서 및 온라인 직원투표)로 선정된 우수 학습동아리
· (내용) 우수 학습동아리의 연구과제 PPT 발표 및 현장 심사로 최우수~장려 선정
· (포상) 최우수 300천원, 우수 200천원, 장려 150천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10건 이상 선정 및 홍보
- 2026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10명 이상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 적극행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대상 포상금 지급 10건 이상
- 공무원 학습동아리 10개 내외 운영 및 우수 동아리 선정·포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개별 부서 중심 업무 수행으로 칸막이 행정 지속, 공동 대응 미흡 • 행정서비스 분야별 업무 이해를 위한 기회 부족으로 다양한 시간 확보 한계	• 타 부서 협업 공동 학습으로 칸막이 행정 완화 및 유기적 협력 조직문화 형성 • 공동 학습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개선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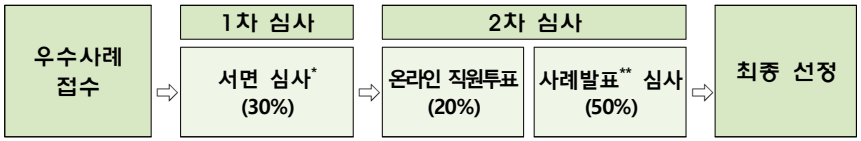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지급 3,000천원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1,000천원
○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5,000천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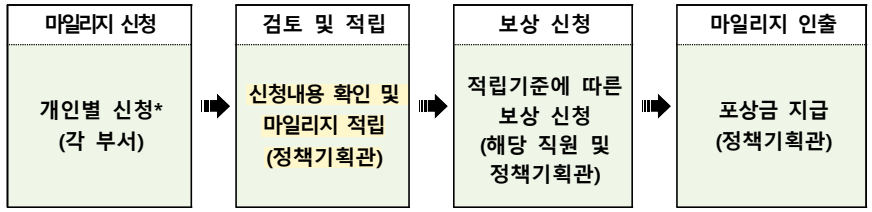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공무원 선정



* 본청 실무팀장으로 구성된 심사단 구성, 최종 선정건수 1.5배 이내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및 주민 모니터링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실무자(공무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



○ 우수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선발 체계

심사구분	심사내용	평가반영
1차 사전심사 (11. 18. ~ 11. 20.)	• 평가단(5인) 구성 및 서면 심사 - 분야별 전문가 구성으로 사례별 평가	70%
	• 온라인 직원투표 - 전 직원 설문조사(1인 2개 동아리) 실시	30%
2차 결선 심사 (12. 17.)	• 5개 학습동아리 PPT 발표 및 심사 -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단(3인) 심사, 시상	100%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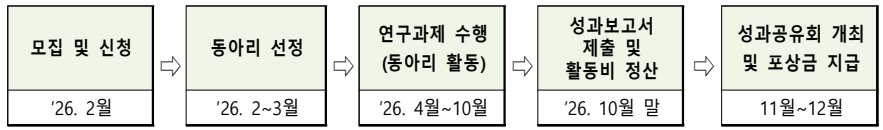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공무원 선발(상반기 기준)

- 경진대회 계획수립 및 우수사례 접수('26. 3.)
- 1차 심사 및 2차 심사('26. 4.)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발('26. 5.)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26. 5.~)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마일리지 제도 계획수립('26. 5.)
- 제도 운영 및 홍보('26. 6. ~ '26. 12.)
- 마일리지 적립 및 인출('26. 6. ~ '26. 12.) * 소요예산 소진 시 까지 운영

○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 홍보계획

○ 카드뉴스 제작, 시도행정 게시판 및 직원 메신저 활용 등 직원 관심 제고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9-1 대전시 주도, 전국 단위 체납법인 협업 징수체계 구축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협조기관/부서	전국 166개 자치단체 체납부서
담당팀명	지방세체납팀	연락처	042-270-4251

□ 추진배경

○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제조·수입자가 납부하되, 전국 유통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납부되는 세목으로 ㈜○○코리아*는 전국에 걸쳐 담배소비세 체납이 발생함

* ㈜○○코리아(부산 ○○구 소재): 166개 지자체 총 체납액 411억 / **대전시 11억(2.7%)**

○ 체납법인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일정 금액(매달 3~5천만 원) 분할 납부 요청, 다수 지자체에 소액 분산된 체납액을 개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 호소

☞ **담배소비세 체납법인 관련 전국 지자체 공동 대응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전국 단위 체납 발생에 따른 행정 비효율 해소방안 마련

- 담배소비세의 분산 귀속 구조로 인해 지자체별 체납부서, 납부계좌, 납부금액 등을 개별적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우리 시 중심으로 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 및 납부 편의제공

- 체납 관련 정보(담당부서, 연락처, 입금계좌 등) 공동 취합
- 납세자가 분할 납부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납부 절차 안내

○ 단계별 추진

- **(1단계)** 체납법인 현장 면담을 통한 분할납부 계획 협의
- **(2단계)** 관계 지자체 협조 요청 및 체납 정보 취합
- **(3단계)** 체납법인 납부방법 안내 및 분할 납부 개시
- **(4단계)** 납부이행 여부 점검 및 지속 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체납법인 분납 이행률 제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기반 확보

○ 기대효과

- 다수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에 대해 협업 기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징수 효율성 제고
- 납세자의 경영활동 보장과 안정적 납부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 유사 전국 단위 체납 사례에 적용 가능한 협력모델 마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추진일정

○ **('24.12.)** 매달 분납액 기준 자치단체별 체납액 비율에 따른 분할납부 기준 안내

※ 징수액 상위 6개 자치단체

(단위: %, 원)

연번	자치단체	체납액	체납비율	매월 징수액	연 환산액
1	**서울특별시**	72,632,556,330	17.5	**5,250,180**	**63,002,160**
2	**부산광역시**	2,364,262,060	5.7	**1,709,150**	**20,509,800**
3	**인천광역시**	2,271,445,780	5.5	**1,642,050**	**19,704,600**
4	**대구광역시**	1,603,702,870	3.9	**1,159,330**	**13,911,960**
5	**광주광역시**	1,122,283,870	2.7	**811,310**	**9,735,720**
6	**대전광역시**	**1,103,498,370**	**2.7**	**797,730**	**9,572,760**

○ **('25.1.)** 법인 체납액 30백만 원 납부, 지자체별 납부계좌 및 금액 통지

* 최초 분납시 대전시 분납액 10,797,730원 우선 징수 후 관련 지자체 안분액 납부

○ **('25.2. ~ 현재)** 월별 납부 이행 여부 점검 및 완납시까지 지속관리

※ '26. 3월말 현재 대전시 32백만 원 징수, 전국 1,030백만 원 징수

9-2 대전시 공원·녹지 수목 관리 기술 역량 강화

주관부서	공원수목원과	협조기관/부서	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
담당팀명	공원관리팀	연락처	042-270-5576

□ 추진배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수목 관리 대상의 지속적 증가로 관리 인력 전문 역량 체계화 필요성 대두

- 경험 의존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표준화된 기술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 현장 수목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시민 제공 녹색공간 품질 향상

○ 공원녹지 수목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현장 교육 연계 필요

※「녹지율 1위에 걸맞는 공원녹지 수목 종합관리계획」/ 공원수목원과-9390호(2025.11.19.)

- 자치구 공원관리 담당 포함, 관련 인력 전반의 역량 균일화 필요
-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 내실화 방침에 따라 실습 중심의 기술 교육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중점 추진사항) 수목관리 기술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외부 전문가 초빙 현장실습 교육
  * 수목의 수종별 전정기법 등 현장실습 / 나무의사협회 협조
- 시·구 합동 업무 연찬회 추진
  * 시설녹지 개선사업 추진 시 현장토론 및 전문가 참여 / 유성 또는 서구
  * 자치구별 공원·수목 관리 추진사항 공유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유지관리 실태 현장점검
  * 공원녹지 유지관리 실태 수시 현장점검 및 보완사항 통보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외부 전문가 초빙 현장실습 (연 1~2회)
- 시·구 합동 업무 연찬회 추진 (연 1~2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유지관리 실태 현장점검 (수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경험 의존적·비표준화된 수목 관리로 품질 편차 발생 • 자치구별 관리 수준 상이로 시민 체감 서비스 불균형	• 표준화된 기술 교육으로 수목 관리 품질 균일화 •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담당 공무원 전문 역량 지속 강화 → 시민 체감 녹지 서비스 향상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외부 전문가 초빙 현장실습 / 대전·충남 나무의사협회 협조
- 시·구 합동 업무 연찬회 추진, 현장점검 / 자체 추진

□ 추진체계

○ 공원수목원과: 총괄 계획 수립, 교육과정 기획·운영, 강사 섭외, 결과 공유

○ 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 현장실습 및 연찬회 교육 참여 등

○ 외부 전문기관(협력): 수목 관리 기법 교육(전정 기법, 병해충 방제 등)

□ 추진일정

○ 업무 연찬회 추진, 전문가 초빙 현장실습(상·하반기 각 1회), 현장평가(수시)

* **(2월)** 공원관리분야 간담회 개최 완료, **(3월)** 찾아가는 '공원 수목관리 현장교육' 실시 완료, 현장점검 3회 완료, **(4월)** 현장점검 1회 완료

□ 홍보계획

○ 대전시 공식 SNS 등을 통한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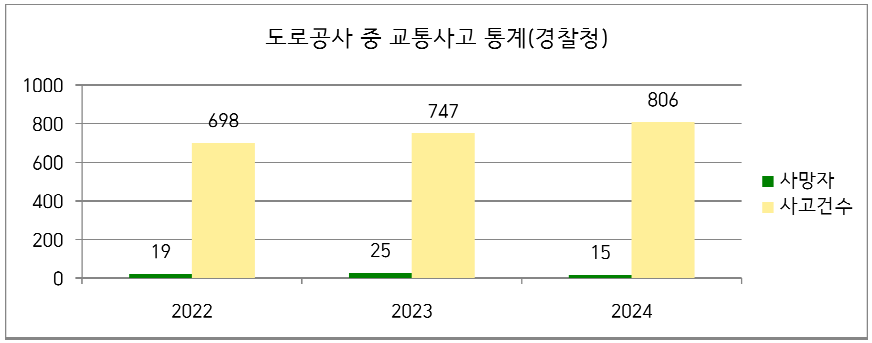
○ 교육 성과 및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등

9-3 도로공사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주관부서	시설정비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즉시처리팀	연락처	042-270-8891

□ 추진배경

- 최근 3년 도로공사 현장의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과 작업자의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



- 도로공사 구간 내 물리적 보호 체계 미비로 인한 현장 근무자의 사고 불안감 해소 및 실질적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 요구
- 「도로교통법」 및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26. 1. 1.부터 작업보호차량에 TMA* 부착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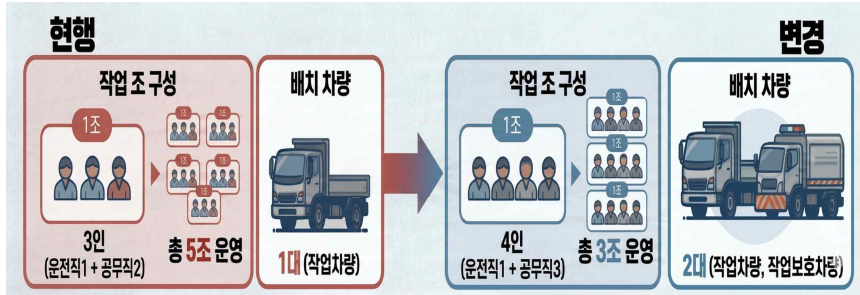
* TMA: 작업보호차량에 장착하는 이동형 완충시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제42조의2 관련)
3.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 기준
나. **작업보호자동차**: 짧은 시간 내의 공사나 차량 이동식 공사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적정 차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점멸 차단판, 경고등, **완충시설 등을 부착한다**.

□ 세부 추진사항

○ 현장 작업자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작업보호차량(TMA) 도입

- **(장비 확충)** '26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작업보호차량에 부착할 TMA 6대를 확보하여 안전 기준 준수 및 시민·작업자 안전 확보
- **(현장 실증)** 장비 구입 전 실제 작업 환경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도로공사 구간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시인성 높은 TMA 도입
- **(공백 관리)** 장비 도입 전까지 가용 자원 및 작업조를 재편성하여 도로 이용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



○ 시민·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체계 확립 및 선제적 사고 예방

- **(기준 정립)** 시민과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매뉴얼을 수립하여 사고 대응력 및 작업 표준화 강화
- **(역량 교육)** 실무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강화하여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 차단
- **(소통 환류)** 업무 연찬, 국민신문고(민원·제안) 등 정책소통창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 개선 및 현장 안전 체계 강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로공사 구간 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고 예방 체계 구축
- 작업보호차량 TMA 부착률 100% 달성 및 법적 기준 준수
- 현장 의견 반영 및 매뉴얼 고도화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철저

○ 기대효과

구분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시민 안전	• TMA 부재로 추돌 시 차량 탑승자의 치명적 인명 피해 우려 • 시인성 부족으로 공사구간 인지 어려움 및 2차 추돌 사고 위험	• 사고 발생 시 충격 흡수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중상해 방지 • 고시인성 장비 도입으로 운전자 주의 환기 및 안전 주행 유도
작업자 안전	• 안전장비 부재로 인한 작업자의 심리적 불안감 노출 • 상이한 작업 방식으로 인한 인적 과실 사고 가능성 존재	• 보호체계 확보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 표준 매뉴얼 및 TBM 강화로 현장 작업의 안전성 상향

□ '26년 소요예산

○ 차량 및 TMA 구입 예산(510,744천원)

- 소형화물(1ton): 24,000천원 × 2대 = 48,000천원
- 중형화물(2.5ton): 60,000천원 × 1대 = 60,000천원
- 다목적트럭(5ton): 70,000천원 × 1대 = 70,000천원
- TMA: 55,000천원 × 6대 = 330,000천원
- 합계: 508,000천원 + 2,744천원(조달수수료) = 510,744천원

□ 추진일정

○ ('26. 4. ~ 5.) 현장 실증 조사 및 TMA 도입 규격 검토

○ ('26. 7. ~ 8.)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26. 9. ~ 11.) TMA 구입 및 작업보호차량 부착

○ ('26. 11. ~) 안전 매뉴얼 고도화 및 대상자 안전 교육 실시

9-4 최첨단 극미량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관리 고도화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인사혁신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담당팀명	노은농수산물검사소	연락처	042-270-6821

□ 추진배경

○ **(현 황)** 노은·오정 공영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다항목 상시검사 수행

* 잔류농약(157종→429종), 동물용의약품(31종→140종) 등 검사범위 대폭 확대

○ **(문제점)** 고성능 최첨단 분석장비 운영 및 숙련도 개선 요구

- 1억분의 1(ppb) 수준 수백종 동시분석을 위한 질량분석기 도입 확대

* 기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순차 도입('21년~, 총 5대 12.6억)

- 국제수준(ISO 17025※) 기준 충족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강화 필요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일반 요구사항

□ 세부 추진사항

○ **(장비·교육)** 최첨단 분석장비 교육훈련 및 운영 내실화

- 심화교육, 전달교육 및 현장교육(OJT) 등 단계별 체계 구축
- 장비별 정기 검·교정 및 검증으로 분석 신뢰성 확보

○ **(숙련도·품질)** 검사능력(숙련도) 평가 참여 및 품질관리 강화

- 식약처 주관 유해물질 검사능력평가 참여로 숙련도 객관적 검증
- 연구자 간 교차검증 및 통계기반 분석(t-test, ANOVA 등) 도입

○ **(분석 확대)** 신규 분석법 도입 및 유해물질 분석항목 확대

- 첨단 분석검사법 적용으로 검출한계 등 개선
- 유해물질 분석항목 지속적 확대 및 신규 분석항목 개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분석 역량 고도화)** 질량분석기 기반 다성분 동시분석 가능 항목 확대
- **(데이터 신뢰성 향상)** 장비 적격성 평가 및 내·외부 검사원 평가 적합 확보
- **(운영 효율 개선)** 경매 전 농산물 정밀검사 처리 건수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제한적 검사항목, 장비의존적 분석 • 일부 재실험 및 숙련도 편차 존재 • 기준초과 적발 중심 대응 및 미량 유해물질 검출 한계	• 질량분석기 기반 극미량 유해물질 안정적 검출 및 다성분 동시 확대 • 숙련도 평가와 인증제 도입으로 분석능력 표준화, 장비활용 최적화로 운영효율 증대 • 다성분 동시분석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경매전 검사 대응력 강화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주관)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인사혁신담당관	(협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첨단장비 운용·유지관리 ·검사항목 확대 및 분석 ·교육, 숙련도, 품질관리 참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직무관련 전문교육 명령 ·직장교육, 상시학습 지원	·유해물질 검사기준 제공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국가정책 연계 기술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콘텐츠 및 전문 인력 역량강화 지원

□ 추진일정

역량 기반 구축 (1~5월)	실행 및 확산 (6~11월)	고도화 정착 (12월)
·장비운영현황, 교육수요 분석 ·장비별 전문 프로그램 선택 ·운영효율 개선 계획 수립	·심화교육, 전달교육 등 실시 ·숙련도 참여 및 교차 검증 수행 ·장비 적격성 평가 등 품질관리	·분석기술 및 검사항목 고도화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홍보계획

○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홍보

- 보도자료, 시 및 연구원 SNS와 홈페이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용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1 대전광역시 생성형AI 영상제작시스템 도입

주관부서	홍보담당관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뉴미디어팀	연락처	042-270-2531

□ 추진배경

○ 공공·민간 사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AI시스템 도입 및 정부 지원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2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기관 대상 'AI혁신 포럼' 개최 및 협력('26.)

○ 구독형 생성형AI 영상제작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필요성 대두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대전광역시 생성형AI 영상제작시스템 도입

○ (사업기간) 2026. 3. ~ 7. / 5개월간

○ (사 업 비) 20,000천원(시비 100%)

○ (주요내용) 구독형 생성형AI 영상제작시스템 도입 및 콘텐츠 제작

- (영상 콘텐츠 제작)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자료를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제작 및 배포
- (업무 효율화) 대전시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및 카드뉴스 제작 지원
- (전 부서 확대 적용) 영상 제작 시범운영('26. 3.) 후 전 부서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보도자료 숏폼영상 월 5건, 인터넷방송 미디어 숏폼 월 1건 제작

- (보도자료 숏폼화) 시에서 발간하는 보도자료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 및 시 유튜브 채널(대전AIPARK)에 배포 / 월 5건
- (인터넷방송 미디어 숏폼화) 시에서 제작하는 영상(대전TV)를 짧은 영상으로 숏폼화 및 시 유튜브 채널, 인터넷방송에 배포 / 월 1건
- (전 부서 확대) 수요 부서(기관)에 계정 공유하여 영상 자체 제작 및 SNS 채널(밴드 등)에 자율 배포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글 형식의 획일화된 보도자료 배포	• 영상 형식의 다양한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채널 등 활용)

□ '26년 소요예산

○ (총예산액) 60,000천원(금육천만원)(시비100%)

○ (금회소요액) 20,000천원(금이천만원)

□ 추진일정

○ 생성형AI 영상제작시스템 활용 및 피드백('26. 7월까지)

10-2 정보시스템 DB 품질진단 및 컨설팅 추진

주관부서	법무통계담당관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담당팀명	데이터통계팀	연락처	042-270-3444

□ 추진배경

○ 대전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

○ 「202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선제 대응

- 행안부 주관「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포함 / 매년 실시

□ 세부 추진사항

○ (기　　간) 2026. 4. ~ 11.

○ (진단대상) 대전시 운영 정보시스템 DB(76개)* 중 45개 이상

* 개별시스템(대표 홈페이지 등) 67개, 공통표준시스템(시도행정 등) 9개

○ (주요내용)

- 정보시스템 **DB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 개선**
-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서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 파일데이터, 오픈API 등 **공공데이터 유지보수** 및 품질 개선
- 공공데이터 정비 매뉴얼 수립 및 교육자료 개발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진단대상 건수)** 전체 시스템 중 **45개 이상 시스템 DB 선정, 진단**

* 행안부 품질관리 수준진단 대응 진단 대상 확대('25년 38건 → '26년 45건, 18%↑)

* 전체 시스템(76개) 대비 60% 수준 확보로 평가 대응력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제한적 진단 수행으로 품질관리 공백 및 평가 대응체계 미비	• 진단 확대로 품질체계 고도화 및 운영 실태 평가·데이터 경쟁력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70,000천 원(시비)

○ 정보시스템 DB 품질진단, 컨설팅 용역비

□ 추진일정

○ 진단대상 DB 선정 : ~ ‘26. 6월

○ DB 품질진단 수행 : ’26. 7 ~ 8월

○ 오류 개선 등 : ‘26. 9월

10-3 대전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주관부서	산업입지과	협조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팀명	산업단지재생팀	연락처	042-270-3773

□ 추진배경

○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에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실시간 사고예방 기여

○ 화재·환경·방범·침수 등 데이터를 동기화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사업현황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일원

○ **(사업기간)** 2024. 8. 1. ~ 2026. 12. 31.(29개월)

○ **(총사업비)** 90억 원(국 60, 시 30)

○ **(사업규모)** 관제 인프라 구축 1식

○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 **(참여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 참여기업 3개사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통합관제 환경조성 및 AI 기반 플랫폼 개발

- AI영상분석 시스템(침수, 화재, 방범), 현장인프라 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발

○ 관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현장인프라 구축

- 자가 통신망(14km), CCTV 설치(184대), 전기화재 IoT센서(25개), 대기환경 IoT센서(33개)

○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App을 통한 편의 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AI영상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산단 노후화에 따른 화재, 침수 등 재난 대응체계 미흡 •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및 운영 인프라 부족 •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청년인력 유입 저조 및 기업 경쟁력 저하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화재,환경, 침수 등 선제적 사고예방 체계 구축 • 기업 근로자에 AI 및 ICT기술 기반의 편의서비스 제공 • 대전산단 청년 근로자 유입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3,000,000천원 / 국비 2,000,000, 시비 1,000,000

□ 추진체계

○ 국비사업 선정 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 위탁하여 추진

구 분	협약 대상자	담당 업무 내용	비고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기획·평가·관리, 사업계획 승인, 국비 교부	
주관기관	대전광역시(산업입지과)	사업관리 주관 및 추진 관리, 지방비 교부	
참여기관 (대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수행, 공동 참여기관(민간) 선정 및 관리	
참여기관 (민간)	웰코모시스템즈 외 2	통합관제센터 구축 세부사업 수행	

□ 추진일정

○ 2026. 3.: 3차년도 사업협약 / 한국산단공 ↔ 수행기관
○ 2026. 5.: 기술장비 심의 및 기타 행정절차 추진
○ 2026. 9.: 현장 인프라 구축 완료
○ 2026. 10 ~ 12.: 통합관제 센터 구축 완료 및 시운전, 최종 평가

□ 홍보계획

○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협조를 통한 게시판 및 입주기업 회의 개최 시 홍보 철저

10-4 하천 불법행위 예방 및 유지관리 스마트 단속체계 구축

주관부서	하천관리사업소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시설과	연락처	042-270-8422

□ 추진배경

○ 하천 내 불법행위 및 쓰레기 적치 문제 지속 발생, 단속 인력 한계로 실효성 저하

□ 세부 추진사항

○ AI CCTV 및 드론 활용으로 스마트 순찰 도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불법행위 감소
- 민원 처리시간 단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사후 대응 중심	•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하천법 관련 조례 일부 개정 검토

□ '26년 소요예산

○ 기존 CCTV → AI CCTV 개량 약 20억 원
○ 적외선 드론 감시 시스템 구축 약 11억 원

□ 추진체계

○ 재난안전과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필요

□ 추진일정

○ 26. 4. ~ 6.: 계획수립

○ 26. 7. ~ 10.: 예산 확보

○ 26. 11. ~ 12.: 사업 추진

□ 홍보계획

○ SNS 및 현수막 홍보

10-5 AI 기반 매개모기 감시체계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협조기관/부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시 질병관리과, 관내 보건소
담당팀명	감염병검사과	연락처	042-270-6705

□ 추진배경

○ **(현 황)**

- 기온 상승 및 강수 패턴 변화로 매개모기 서식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뎅기열 등 아열대성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
- 열대집모기가 제주지역에 토착화되고 남부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매개체 분포 변화에 대한 정밀 감시 필요성 증대
- 유문등 및 디지털모기측정기(DMS)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모기 밀도 및 병원체 분석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 **(문제점)**

- 주기적 채집·분석 중심 감시체계로 모기 발생 변화 및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존재
- 감시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나,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품질 및 운영 안정성 확보는 추가 보완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매개체 유입 가능성 증가에 비해 집중 감시 체계 미흡

○ **(필요성)**

- 기존 감시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축적 및 분석체계 고도화를 통한 AI 활용 기반 마련 필요
- DMS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 필요
- 열대집모기 등 신규 매개체 집중 감시를 통한 AI 기반 감시체계 적용 기반 마련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기존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및 데이터 축적

- 도심지역 감시지점* 중심 감시체계 지속 운영

  * 5개소: 한밭수목원, 중촌근린공원, 대덕구보건소, 유성구보건소, 동구보건소

- 유문등 및 DMS를 활용한 모기 밀도조사 및 병원체 분석 수행

○ DMS 운영 안정화 및 데이터 품질 확보

- DMS 장비 정상 가동률 관리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장비 오류 및 통신 장애 대응체계 마련
- 지속적 데이터 축적을 통한 AI 활용 가능 데이터 기반 마련

○ 열대집모기 유입 대비 집중 감시체계 운영

- 모기 발생 집중시기(7~8월) 열대집모기 유입 여부 중점 확인
- 종 분포 변화 및 밀도 변화 집중 분석
- 신규 매개체 감시자료 확보를 통한 AI 분석 기반 마련

○ AI-DMS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감시자료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 AI 적용을 위한 기초 데이터셋 구축
- AI-DMS 설치 후보지 검토 및 운영환경 사전 설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기존 감시체계 기반 매개모기 데이터 안정적 수집
- DMS 운영 안정화를 통해 AI-DMS 도입을 위한 데이터 및 운영 인프라 구축
- 열대집모기 집중 감시를 통한 신규 매개체 데이터 확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주기적 감시 중심 운영 • 장비 운영 편차 존재 • 신규 매개체 감시 제한적 • 감시자료 축적 위주	• 데이터 기반 감시체계 고도화 • 안정적 장비 운영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 열대집모기 등 신규 매개체 집중 감시 • AI 활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시험연구비(감염병검사-연구개발비)

□ 추진체계

○ (보건환경연구원) 매개모기 감시 및 DMS 운영, 데이터 축적과 AI-DMS 도입 기반 구축 총괄

○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권역 감시자료 통합분석 및 기술지원

○ (시 질병관리과) 감시지점 운영 협조 및 방역 대응 연계

○ (보건소) DMS 설치 지점 운영 협조 및 방역 대응 지원

□ 추진일정

○ 감시계획 수립 및 협의: '26년 3월

○ 감시체계 운영 및 데이터 수집: '26년 4 ~ 10월

○ 집중 감시(열대집모기 유입 확인): '26년 7 ~ 8월

○ 데이터 분석 및 정비: '26년 11월

○ AI-DMS 도입 기반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26년 12월

□ 홍보계획

○ 감시결과 및 매개모기 발생정보 정기 제공

○ 주요 상황 발생 시 보도자료 배포

○ 관계기관 정보 공유 및 활용 확대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1-1 전 직원 AI 역량강화 교육

주관부서	정보화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정책기획관, 인사혁신담당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담당팀명	정보정책팀	연락처	042-270-3211

□ 추진배경

○ **(민간) 산업·경제**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키는 AI 사회로 진입, 민간기업 중심으로 **AI 활용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정부)** AI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라 직원들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와 **행정업무 활용 역량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추진기간)** 2026. 3 ~ 11월

○ **(대상)** 전 직원 / 4,091명('26. 3. 11. 기준, 공무직 제외)

○ **(교육과정)** 단계별로 전 직원 AI 역량을 체계적 고도화 추진

① **수준진단** : AI 이해도와 활용 수준을 진단, 교육 방향을 설정

② **특　　강** : AI 기술 동향과 공공 활용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③ **기초교육** : AI 기초 리터러시를 전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

④ **활용교육** : 문서작성・자료분석 등 실무 중심 활용 역량 강화

⑤ **심화과정** : AI 기반 업무혁신 역량을 갖춘 핵심 인력 양성

○ **(운영체계)** **간부공무원**(2회, 2시간), **5급이하 직원**(14회, 3시간) 구분 운영,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서 성과평가(BSC) 반영**

☞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로 행정업무 효율 제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전 직원 AI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 95% 이상 달성
- AI 활용 역량 3단계 이상 직원 비율 확대

→ (현황) 1~3단계 중심 → (목표) 3단계 이상 50% 이상 전환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AI 활용 역량이 도입·인지 단계에 집중되어 실제 업무 적용이 미흡하고 개인별 활용 편차가 큼 • 사용법 미숙, 업무 적용 방법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로 체계적인 AI 활용 기반 부족	• 전 직원이 AI를 문서작성·자료분석 등 실무에 활용하는 '업무 활용 단계' 중심으로 전환 • 표준 교육과 활용체계 구축으로 조직 전반에 AI 활용이 확산되고 행정업무 효율성과 정책 품질 향상

□ '26년 소요예산

○ 전 직원 특강 및 실시간 영상교육 8,280천원

□ 추진체계

○ **(정보화정책과)** AI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교육과정 기획 및 일정 관리, 실시간 교육 운영 및 강사 섭외, 교육 성과관리

○ **(정책기획관)** AI 교육 이수율 BSC 공통지표 반영

○ **(인사혁신담당관)** 교육 예산 지원, 상시학습 시간 인정

○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심화교육(집합교육) 과정 운영

□ 추진일정

○ **(수준진단)** AI역량 진단 / 2026. 3 ~ 4월

○ **(전문가특강)** AI 전문가 특강 / 2026. 5월

○ **(기초과정)** 인재개발원 사이버 콘텐츠 활용 / 2026. 4 ~ 12월

○ **(활용과정)** 실습 중심 역량 교육 / 2026. 6 ~ 8월

○ **(심화과정)** 부서 내 AI 핵심인력 양성 / 2026. 9 ~ 11월

11-2 AI 역량교육 지원

주관부서	인사혁신담당관	협조기관	자체운영
담당팀명	교육팀	연락처	042-270-2962

□ 추진배경

○ 행정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실습교육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 업무 효율성 도모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주 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효율 개선 교육

○ **(기 간)** 연 2회

○ **(대 상)** 50명 / 6~8급 실무급 직원*

* AI 서포터즈 선발·교육 후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AI활용 방법 전수

○ **(운영방법)** AI 서포터즈 선발(실·국별 배정)을 통한 교육

○ **(주요내용)** 이론 및 실습교육

구 분	내 용	비 고
프롬프트 기법 습득	▸공공기관 AI 활용 보안 수칙 숙지 ▸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질문 구성 실습	이론 20% 실습 80%
행정자료 분석 및 요약	▸대용량 행정 자료 분석 및 정확성 검증 ▸정책 자료 심층 분석 및 보고서 초안 작성	
AI 챗봇 제작	▸개별 업무 목적에 맞는 지시문 설계 ▸실무에 적용 가능한 업무 보조 챗봇 구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생성형 AI 핵심 기능 숙지 및 행정 실무 적용

○ 기대효과

- 단순·반복 업무 경감으로 확보된 행정력을 정책기획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구현

□ '26년 소요예산

○ 2,495천원(시비) / 강사수당 및 생성형 AI 구독료

□ 추진일정

○ **('26. 4월 중)** 추진 계획 수립 및 서포터즈 선발

○ **('26. 4월 말)** 교육 시행

11-3 AI Agent 개발 교육

주관부서	반도체바이오산업과	협조기관/부서	인사혁신담당관
담당팀명	인공지능팀	연락처	042-270-0391

□ 추진배경

○ **(현황)**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행정 현장에서도 문서작성, 자료요약, 반복업무 처리 등 업무 효율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기존 외주 중심 AI 도입 방식은 행정업무의 복잡성·현장성·즉시성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이 직접 AI 도구를 이해하고 업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함

□ 세부 추진사항

○ **실무형 AI Agent 개발 교육 시범 운영**

- 기간: 2026. 2. 25. ~ 3. 27. / 매주 수·금 15:00~18:00 / 총 10회 30시간
- 장소: 시 본청 전산교육장(4층)
- 대상: 본청 근무 6~9급 직원 20명
- 내용: AI 개념 이해, 생성형 AI 활용, 노코드 자동화, Vibe Coding 등 실습 중심 교육 운영

○ **현장 중심 교육 운영 및 성과관리**

- 참석자 관리, 실습 중심 강의,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 교육 만족도, 업무 적용 가능성, 확대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후속 확산 여부를 검토함

○ **대주민 소통 및 확산 방안**

-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 사례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업무 개선 사례 발굴
- 향후 문서작성 지원, 자료정리, 민원 응대 보조 등 실제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내부 공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본청 직원 대상 실무형 AI Agent 교육 20명 이수
- 교육생 모집 시 통해 공직사회 내 높은 AI 교육 수요 확인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생성형 AI 활용이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조직 차원의 활용 기반이 미흡함 • 공무원이 직접 업무형 AI 도구를 제작·수정하는 경험이 부족함	• 공무원이 직접 AI 도구를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반복·정형 업무 처리 효율 향상 및 정책 기획 등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여건 조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사업은 교육 운영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별도의 자치법규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7,200천 원 / 인사혁신담당관 예산 활용

- 강사수당(6,600천 원), Cursor AI 등 구독료 지원(600천 원)

□ 추진일정

○ '26. 1월: 교육 추진계획 수립

○ '26. 1. 28. ~ 2. 6.: 교육생 모집

○ '26. 2. 25. ~ 3. 27.: 교육 운영(총 10회)

○ '26. 3월 말: 만족도 조사 및 교육성과 점검

□ 홍보계획

○ 홍보방법: 언론보도(지역 언론사 및 온라인 뉴스 매체)

○ 홍보내용: 공무원 대상 AI Agent 개발 교육 운영, 행정 효율화 및 공무원 주도의 AI 전환 추진 내용 홍보

Ⅲ.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부혁신) 과제

1 스포츠꿈돌이 종목별 캐릭터 개발 및 활용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협조기관/부서	대전관광공사/명품디자인담당관
담당팀명	스포츠마케팅팀	연락처	042-270-4482

□ 추진배경

○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일류스포츠 도시 대전의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23년 12월 대전 '꿈씨' 프로젝트 시작에 따른 '꿈씨패밀리' 활용 도시마케팅 활성화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스포츠 종목별 꿈씨 캐릭터 동작 및 의상 등 디자인 개발

○ 입체적, 역동적 캐릭터 개발로 활용도 높은 디자인 개발

○ 각종 전국대회 및 생활 체육대회 개최 시 홍보자료, 물품, 온라인 홍보 등 적극 활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스포츠 꿈돌이(또는 꿈씨 패밀리) IP 구축 완료*
  * 종목별 캐릭터 디자인 활용 가이드라인 초안 제작
- 도시마케팅 노출 극대화*
  * 전국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캐릭터 홍보물 활용도 제고(연 5회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특정 종목에 국한된 캐릭터 활용으로 스포츠 홍보마케팅 한계 • 단일성으로 인한 마케팅 파급력 미흡	• 여러 종목에 꿈씨 패밀리를 접목·개발, 활용도 높은 다양한 캐릭터 보유 • 입체+역동적 캐릭터 활용을 통해, 홍보마케팅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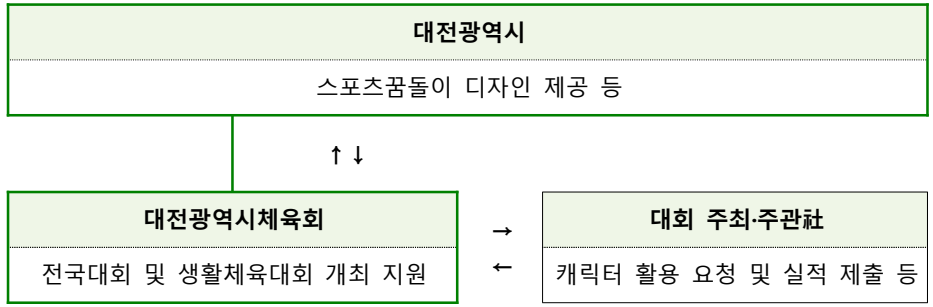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캐릭터 활용 사업)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연중 상시

- 대회별 요청 시 해당 대회에 적합한 스포츠 꿈돌이 제공
- 활용 및 사용실적 취합

□ 홍보계획

○ 반기별 스포츠꿈돌이 활용,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요청

○ 대회별 캐릭터 활용 및 사용 실적 취합

- 디자인 개발자 포트폴리오 자료 제공산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

주관부서	식의약안전과	협조기관/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팀명	식품위생팀	연락처	042-270-4884

□ 추진배경

○ 고령화, 사회적 돌봄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증가

○ 영양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급식 위생·안전 관리 필요**

-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458개소 중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은 154개소로, 전체의 **66.4% 영양사 없음**

* 출처: '25년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 운영 현황 조사(식의약안전과-11356호)

□ 사업 내용

○ 명칭: **동·중·서·유성·대덕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기관: 대학 산학협력단(동구/서구/유성/대덕), 대한 영양사회(중구)

○ 사업대상: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및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

○ 사업내용: 급식소 컨설팅, 순회방문지도(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대상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 및 조리법 제공 등

○ 사업예산: 4,464백만원(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는 전체 의무 등록**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 세부 추진사항

○ 2024년 7월 대덕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2025년 7월 동구·중구·서구·유성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5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개소 완료

○ 2025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급식소 319개소 등록·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사회복지시설 확대

2025년 319개소 → 2026년 360개소 (41개소 추가 등록)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사각지대 존재(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 소외) • 영양사 부재로 인한 체계적 식단 관리 미흡	• '찾아가는 급식 관리'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영양사의 맞춤형 식단 제공으로 영양 개선

□ 관련 자치법규 및 조례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추진일정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안내문 제작('26. 1월)

○ 미등록 기관 파악 및 유선 홍보('26. 2월 ~ 5월)

○ 등록 희망기관 방문 홍보 및 미결정 기관 재홍보('26. 6월)

○ 등록 진행 및 순회방문지도 실시('26. 7월 ~ 12월)

□ 홍보계획

○ 지역 사회복지시설 연계행사 참여

- 대전 사회서비스 엑스포(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주관) 홍보 부스 운영('26. 9월)

○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시 급식소 등록 안내('26. 11월)

Ⅳ. 지방정부 혁신 확산 방안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단계별 AI 활용 역량 강화**

- 기초과정: 전 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 활용과정: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실무 역량 강화
- 심화과정: 집합교육을 통한 핵심 인력 양성

* 직원 교육 의무화: AI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 BSC 공통지표 반영
(간부공무원: 2회, 2시간 / 5급이하 직원: 14회, 3시간)

- AI Agent 개발 교육: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유도

○ **공직자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

- 최신 트렌드 및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미래전략 등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특강* 추진

* '26. 4. 9.: AI 시대 인간의 길: 인문학적 사고로 읽는 시대흐름

-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강화

○ **기관장-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 공감대 형성

- 정례 소통 프로그램(좋은아침 공감톡톡)을 활용하여 시정 방향, 주요 혁신사례 및 정책 동향 공유

○ 자율적 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다양한 직무·관심 분야 중심의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지식 공유 활성화
-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부서 간 협업 네트워크 형성 지원

○ 혁신 참여 확산을 위한 **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 BSC에 혁신 관련 지표 반영하여 참여 유도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성과 창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적극 참여 유도

□ 성과 홍보 방안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략적 홍보 추진**

- 보도자료, 인터뷰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혁신 성과 확산
-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생성형AI 영상제작시스템 활용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홍보
- SNS 인플루언서, 가수 등 다방면의 전문가 위촉하여 정책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시정 홍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홍보 체계 구축

○ **시민 체감 중심**의 성과 홍보

- 정책 수혜 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도 제고
- 주효 혁신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배포

○ **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

- 정부혁신 관련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 혁신사례집 제작·배포로 시정 성과 체계적 관리 및 전파